

#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기 간: 2026년 4월 19일(일) - 4월 25일(토)

출장지: 프랑스 파리

출장자: 신서경 부연구위원

## I. 출장개요

1. 출 장 지: 프랑스 파리
2. 출장기간: 2026년 4월 19일(일) ~ 2026년 4월 25일(토) (5박 7일)
3.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도시연구본부	부연구위원	신서경

### 4. 출장목적:

- (1) 2026년 제55차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RDPC)회의 참석
- (2) 제39차 도시정책 작업반 회의 참석
- (3) 제35차 비도시정책 작업반 회의 참석
- (4) 국토연구원-OECD 네트워크 강화

### 5. 주요 목표:

- 회원국별 지역정책 관련 발제 및 토론을 참관하여 주요 국가의 정책 동향을 체계적으로 파악
- 도시, 비도시, 지역정책 분야에 대한 회원국 간 경험과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비교·분석을 통해 시사점 도출
- 한국 대표단(국토교통부) 회의 발표에 대한 자문을 수행
- 국토연구원-OECD 네트워크 강화

### 6. 출장의 기대효과:

-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RDPC) 회의 참석을 통해 주요 지역정책 이슈 및 전략적 방향을 체계적으로 파악
- RDPC 내 국토연구원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토연구원-OECD 간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
- 지속적인 국제회의 참여를 기반으로 최신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확대·강화
- OECD 국제회의에서 지역정책 관련 한국 대표단의 발의안에 대한 자문을 수행함으로써 정책지원 전문기관으로서 국토연구원의 역할 공고화

7. 한국대표단 및 지원인력 구성

(1) 국토교통부: 8인

- 이주열 국장(정책기획관)
- 권유정 과장(국제협력통상담당관)
- 김종성 과장(신도시정비지원과)
- 박상우 사무관(국제협력통상담당관)
- 박정규 사무관(기획조정실/미래전략담당관실)
- 한준수 주무관(국제협력통상담당관)
- 정예은 주무관(도시활력지원과)
- 문성윤 자문관(국제협력동상담당관)

(2) 국토연구원: 1인

- 신서경 부연구위원(도시연구본부)

(6) 주OECD 대표부: 1인

- 김남균 과장

(7) OECD 사무국: 1인

- 이랑 과장

## II. 출장일정

일정	출발지	도착지	업무수행내용	비고
2026년 4월19일(일)	인천	파리	(10:05) 인천 출발(OZ501) (17:20) 파리 도착	
4월20일(월) 10:00~12:00 14:00~16:00	파리 OECD 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가 인터뷰</li> <li>- 중장기 OECD RDPC 대응 기반 구축을 위한 전문가 인터뷰</li> </ul>	
	파리 국토부 숙소 인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장단 OECD 의제 사전점검</li> <li>- 출장단 업무분장</li> <li>- 인력별 지원할 회의 결정</li> <li>- 국토부 발의내용 작성/검토</li> <li>- OECD 대표부 및 사무국 인력 점검</li> <li>- 회의장 위치, 이동 동선, 회의 일정 점검</li> </ul>	
4월21일(화) 09:00~18:00	파리 OECD 본부 회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5차 비도시정책 작업반 회의</li> <li>- 개회 세션</li> <li>- 지정학적 충격이 농촌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국가 농촌전략 수립 방향</li> <li>- 농촌개발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축</li> <li>- 농촌 일상 시스템</li> <li>- 농촌-도시 연계와 주택</li> <li>- 네트워킹 행사</li> </ul>	
4월22일(수) 09:30~18:00	파리 OECD본부 회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55차 지역개발정책위원회(RDPC) 회의(1일차)</li> <li>- 개회 세션</li> <li>- RDPC 2027-2030년 업무계획 및 예산 초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발전, 안보 및 국방</li> <li>- OECD 내 지역발전: 전환 관리, 지역 격차 및 정책 간 상충관계</li> <li>- 지방정부 인프라 투자: Compass 및 OECD-유럽지역위원회 조사 결과</li> <li>- 네트워킹 행사</li> </ul>	
4월23일(목) 09:30~18:00	파리 OECD본부 회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55차 지역개발정책위원회(RDPC) 회의(2일차)</li> <li>- 개회 세션</li> <li>- 서비스 접근성의 지역 간 격차</li> <li>- 지방정부 간 협력 활용</li> <li>- 기후회복력을 위한 물 거버넌스</li> <li>- 부동산 회복력</li> <li>- 지역 회복력 및 재난관리</li> <li>- 네트워킹 행사</li> </ul>	
4월24일(금) 09:15~15:00	파리 OECD본부 회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연구원-OECD 업무협의회</li> </ul>	
	파리	(19:10) 파리 출발(OZ502)	
4월25일(토)	인천	(14:10) 인천 도착	

### III. 수행사항

#### 국토연구원(KRIHS)-OECD 협동 연구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 1. 회의명

- 국토연구원 (KRIHS) -OECD 협동 연구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 2. 일시 및 장소

- 2026년 4월 20일 (월), 10:00 ~ 12:00
- OECD Headquarters Meeting Room

##### 3. 참석자

- 김준하 과장(OECD Economics)
- 신서경 부연구위원 국토연구원

##### 4. 주요 논의내용

- 현재 진행되고 있는 OECD와 국내 기관 간 연구 동향 등 파악
  - 현재 OECD-대한민국 정부 간 협업으로 경제지표 관련 보고서를 정기 발행하고 있음
  - 가장 최근 발간한 보고서는 “OECD 한국경제보고서 2024”로 해당 보고서는 한국경제가 반도체 수출 회복에 힘입어 성장 약화 국면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평가하였고, 고용은 높은 수준에서 안정적이고 실업률은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하였음
  - 또한 해당 보고서는 가계부채와 건설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을 금융안정 리스크로 지적하고, 중소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 국내시장 경쟁을 강화하는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 끝으로 동 보고서는 고령화에 대비한 재정건전성 확보, 반경쟁적 규제 철폐,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 확대, 외국인력 활용 제고를 주요 메시지로 정리하였음

- 이 외에도 “OECD Economic Outlook 2025”은 한국의 경제를 전망을 포함하고 있음
  - 최근 전망은 한국의 성장률이 2025년에 약화된 뒤 2026년에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였고, 대한민국 대표부가 정리한 OECD Economic Outlook 2025 Issue 2 기준으로 한국 경제성장률은 2025년 1.0%, 2026년 2.1%로 제시하였음
  - 더불어 소비는 완화적 재정·통화정책의 지원을 받고 수출은 성장에 기여했으나 중기적으로 둔화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음
  - 해당 자료는 관세 협상 불확실성, 글로벌 공급망 구조 변화, 무역정책 변화, 인플레이션 재상승, 금융시장 리스크가 한국의 수출과 기업투자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함
  - 그밖에 “OECD-KOSTAT Global Conference 2025”는 공식 통계의 미래와 AI 기반 지표 측정 방법론을 다루는 최신 협력 사례임
  - 해당 회의에는 통계청과 OECD 통계데이터국이 참여하였고, AI와 공식 통계, AI 투자 측정, 생산성 통계, 노동시장·숙련 지표, GDP 예측모형, 무역·생산성 통계 등이 주요 주제로 다뤄짐
  - 해당 회의에서는 전통적인 GDP·물가·고용 지표뿐 아니라 AI 확산, 디지털 전환, 생산성 변화 같은 새로운 경제현상을 어떻게 공식 통계로 측정할지에 초점을 둔 협력으로 이어갈 것을 논의함
- OECD와 진행 중인 협동 연구 내용 등 추진 배경 및 경과 청취
    - OECD와 한국 대표단은 장기간 정례적으로 경제지표 관련 보고서 작업을 비롯한 국제 회의를 이어오고 있음
    -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비롯한 인구구조 변화(인구감소와 고령화), K-AI City 등 경제적 쟁점 외에도 국내 여건과 특수성을 중심으로 연구 협력을 이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제35차 비도시정책(Rural Policy) 작업반 회의

### 1. 회의명

- OECD 비도시정책 작업반 회의

### 2. 일시 및 장소

- 2026년 4월 21일 (화), 9:00 ~ 18:00
- OECD Headquarters CC 02

### 3. 참석자

- OECD 회원국 대표단
- OECD 비도시정책 작업반 발표자 등 담당자
- 김종성 과장 국토교통부, 문성윤 자문관 국토교통부
- 신서경 부연구위원 국토연구원

### 4. 주요 주제

- [Item 1] 회의 개회
- [Item 2] 지정학적 충격이 농촌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국가 농촌전략 수립: 원탁 토론 및 향후 연구 우선순위
- [Item 3] 경제적 관점 - 비도시(농촌, Rural)지역 개발을 위한 광업, 데이터 센터 및 관광 분야의 혁신
- [Item 4] 사회적 관점 - 인구 변화 관리 및 사회적 경제의 역할
- [Item 5] 환경적 관점 - 산림 및 농촌(비도시지역) 개발 계획
- [Item 6] 비도시(농촌, Rural)-도시 연계 및 주택: 농촌 개발을 위한 기회
- [Item 7] 비도시(농촌, Rural)지역 일상 시스템: 패턴과 추세
- [Item 8] 회의 폐회

## 5. 주요 논의내용

### ● 회의 결과 요약\*

\* 작업반 회의 주제별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요약함.

- 제35차 비도시정책 작업반 회의의 핵심은 OECD 해당 작업반 담당자가 추진한 주요 프로젝트의 경과를 공유하고 이를 중심으로 작업반 회의에 참석한 OECD 회원국별 대표단의 의견 수렴을 중심으로 진행함
- 주요 논의 사항은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한 농촌·지역 정책이 외부 충격, 인구구조 변화, 에너지 전환 속에서 어떻게 지속 가능한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룸
- 특히 논의 구성 및 내용은 비도시정책을 경제, 사회, 환경의 세 축으로 나뉘어 외부 투자·산림·관광·데이터 센터·광물자원·공공서비스 등 비도시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참석한 대표단이 추진하거나 생각하는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공유함
- 보다 구체적으로 회원국의 비도시지역이 겪는 인구감소, 고령화, 에너지 가격 상승, 지정학적 리스크, 서비스 축소 같은 문제를 공유하고, 이를 지역 자산을 활용한 성장 기회로 전환하는 정책을 논의하는 데 집중함
- 이와 함께 향후 비도시정책 작업반의 과업 추진 계획과 예산, 향후 회원국과의 협력 과제, 2027년 차기 회의 개최지 제안 등을 함께 논의함

### ● 주요 주제별 논의 요약

#### (1) 경제적 관점(economic pillar)

- 경제적 관점에서 비도시지역에 들어오는 외부 투자를 어떻게 지역발전으로 연결할지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함
- 참석한 회원국 대표단은 구체적으로는 광업, 관광, 데이터 센터를 사례로 들며 단순한 자원 추출이나 시설 유치가 아니라 지역 고용, 지역기업, 인프라,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지게 하는 제도 설계의 필요성을 논의함
- 일례로 호주 대표단은 광업과 기술 산업의 연계, 터키 사례는 광물의 지역 내 고부가가치화, 크로아티아 사례는 산업전환 계획을 통한 맞춤형 투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발언함

#### (2) 광산지역의 재성장

- 광업 관점의 논의는 회원국 내 광산지역(비도시지역)이 경제적 이익을 얻는 동시에

- 높은 비용, 환경압력, 불평등, 지역 갈등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함
- 일례로 호주 대표단은 원거리 광산지역의 한계, 지역 혁신, 중소기업 연계, 기술·장비(MET)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발언함
- 터키는 광물을 원료 수출이 아니라 지역 산업화의 기반으로 보고, 세제·보조금·사회보장 지원 등을 통해 지역 내 부가가치화 전략을 견지하고 있다고 발언함
- 폴란드도 석탄·광업 전환 지역에서 ‘정의로운 전환 기금(Just Transition Fund)’을 활용해 고용의 전환과 신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언함

### (3) 관광과 지역발전

- 비도시지역의 관광에 관한 논의는 비도시지역 내 경제 다각화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 대다수 참석국 회원국이 동의함
- 일례로 OECD 관광위원회는 관광이 GDP와 서비스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특히 비도시지역에서 일자리와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는 기회 요인이라고 설명함
- 다만, 과밀화와 인프라 부담, 지역주민 불편과 같은 부작용도 커서 지속 가능한 관광지 관리와 다층 거버넌스 역시 함께 개선되어야 하는 중요 정책과제임을 강조함
- 이와 관련해 일본은 농촌관광을 재방문·투자 유치와 연결하는 사례를 제시했고, 코스타리카는 농촌관광이 GDP와 지역생계에 기여하는 대표 사례를 소개함

### (4) 비도시지역 내 데이터센터 유치와 에너지

- 데이터센터는 새롭게 부상한 농촌 외부 투자 유형으로 다뤄짐
- 일례로 한국 대표단은 재생에너지와 데이터센터를 묶어 비도시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전략을 발언했고, 대규모 기업 투자와 전력 공급 안정화, RE100,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을 언급함
- 한편, OECD 측은 데이터센터와 같은 시설이 비도시지역에 들어올 때 지역 고용, 에너지, 토지, 인프라, 공동체 이익을 어떻게 연결할지가 중요하다고 정리함

### (5) 사회 부문

- 사회 부문에서는 인구감소, 고령화, 서비스 축소, 주거 문제, 에너지 빈곤이 중요한 주제로 반복 논의됨
- 일례로 핀란드는 비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국가안보·복원력·식량 안보·핵심 인프라와 연결했고, 노르웨이는 북부 지역의 안보와 정주여건, 인프라, 주거, 서비스 제공을 강조함

- 더불어 일본은 농촌 공동체 약화가 농업과 공공서비스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 지역공동체 관리와 민관협력의 중요성을 발언함
- 캐나다·아이슬란드·스페인 등도 에너지 충격과 생활비 상승에 대응하는 단기 지원과 장기 구조개혁의 병행을 언급함

## (6) 환경과 산림

- 환경 부문에서는 산림과 기후 적응, 탄소중립, 다기능성을 핵심 키워드로 논의를 전개함
- OECD 비도시정책 작업반 담당자는 산림이 목재 생산만이 아니라 생물다양성, 수자원 보호, 레크리에이션, 탄소흡수 등 다기능 자산이라고 설명함
- 이와 연장선상에서 일본은 공공-민간 협력을 통한 산림관리와 산림 보전 인증제도를 소개했고, 프랑스·스웨덴은 서로 다른 산림구조와 소유구조를 공유하며 상호학습 필요성을 강조함
- 더불어 핀란드는 산림정책을 전환기 경제와 기후 적응의 일부로 보고, 활성 산림관리와 이해관계자 참여의 중요성을 발언함

## (7) 회의 주요 내용의 정책적 시사점

- 회의 결과, 비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단순한 보조금 지원이나 비용 보전이 아니라 지역 자산을 활용한 전략적 투자 관점으로 전환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저변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함
- 이와 관련해 논의된 핵심적 방향성은 지역 맞춤형(place-based) 접근, 다양한 부문 간 연계, 민관협력, 지역거버넌스 강화, 데이터 기반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음
- 또한 OECD는 비도시지역이 기후 위기, 전쟁 등 분쟁으로 인한 피해 지역이자 취약 지역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의 에너지, 식량, 산림, 관광, 혁신을 공급하는 지역이자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정리할 수 있음

### ● 주제별 (Item) 주요 회의 내용

#### (1) [Item 1] 작업반 회의 개최 (09:30-09:45)

- 비도시정책 작업반장 발언
  - 회의 개최 및 진행 방향, 발언 시간 등에 대한 안내

- 올해 초 결정한 비도시정책 작업반의 신규/지속 프로젝트와 예산에 대한 환기, 이후 추진 경과 공유

(2) [Item 2] 지정학적 충격이 비도시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국가 농촌전략 수립: 원탁 토론 및 향후 연구 우선순위 (09:45-11:15)

● 비도시정책 작업반장 발언

- Item 1의 신규/지속 프로젝트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 회의에 참석한 OECD 회원국 대표단의 의견 요청
- 특히 Item 2 주제와 관련한 회원국 대표단의 지정학적 여건과 문제 아래 추진하고 있는 비도시지역 정책에 관한 현실과 새로운 대안, 정책적 도전 과제 등에 대한 발언과 논의 요청
- 본 회의에서 발표하는 OECD의 환경 및 관광 위원회, 농업 위원회의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회원국 대표단의 의견 청취 예정

● 비도시정책 작업반의 PWB 보고

- PWB 보고는 회원국의 지정학적 충격과 에너지 위기가 농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를 반영한 향후 OECD 비도시정책 작업계획을 개관함
- 핵심 내용은 비도시지역이 위기에 더 취약하지만, 동시에 재생에너지·산업·기술·자원 전환의 거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
- 요컨대, 현재 전 세계가 여러 위기 속에 있고 지정학적 충격이 에너지 시장과 무역을 흔들며 비료 가격과 생산비를 크게 올리고 있음
- 이러한 배경 아래 비도시지역은 농업, 제조업, 자원채굴, 에너지 집약 산업 의존도가 높고, 시장과 멀어 운송비 부담도 커서 이런 충격에 특히 취약함
- 또한 비도시지역은 인구가 고령화되고 이동성이 낮아 에너지 빈곤과 사업 중단 위험이 더 크다고 지적함
- 다만, 이런 위기는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할 수도 있으며 비도시지역은 OECD 재생 전력의 약 63%를 생산하는 중요한 공간임을 강조함
- 다음으로 OECD가 제시한 농촌 성장의 4가지 축을 설명함
- 첫째, 농촌의 고유 자산을 활용한 전략적 투자이며, 재생에너지·국방시설·기술시험장 같은 투자가 여기에 포함됨
- 둘째, 제조업과 같은 거래가능 산업을 키워 외부시장과 연결하는 것이고, 셋째는 도

- 시와 농촌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것임을 설명함
  - 끝으로 네 번째는 광업·산림 같은 자연자원을 전략적으로 관리해 장기 발전으로 연결할 것을 강조함
  - 이어 정책적 추진 방향으로는 각 회원국의 비도시지역 여건이 서로 다르므로 장소기반 접근(place-based approach), 부문을 넘는 통합 접근, 그리고 주거·교통·교육·보건·디지털 등을 함께 보는 사람 중심 정책이 필요하다고 종합함
  - 이 같은 정책 추진 방향을 구현하기 위해서 정책 집행의 주체로서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역정부와 지방정부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다만, 많은 비도시지역은 인력, 전문성, 재정이 부족하므로 역량 강화와 협력체계, 재정틀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함
  - 또한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정책 초기부터 반영해야 농촌 불만과 소외감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함
  - 끝으로 PWB 보고는 작업반의 신규 4개년 작업계획의 큰 틀을 제시하면서, 경쟁력·혁신, 글로벌 전환, 다층거버넌스와 재정, 데이터, 글로벌 참여 같은 축 안에 비도시지역 관련 과제를 반영하겠다고 밝힘
  - 여기에는 자연자원, 국가 농촌전략, 안보와 국방, 그리고 AI를 활용한 정책 모니터링·평가도 포함됨
- 주제 (Item) 관련 대표단 주요 발언
    - (폴란드) 현재 폴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바뀐 안보·경제 환경 속에서 비도시지역과 국경 지역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정책에 집중고 있음
    - 이에 따라 폴란드 정부의 농업부는 식량 안보와 농식품 부문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쪽에, 지역개발부는 국경 지역과 인구감소 지역의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힘
    - 구체적으로 2023년에는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EU 재정 변화에 대응해 지속 가능한 농업·어업·식품 전략을 제고하였고 공급망 복원, 생산성 강화, 기후위기 대응, 바이오경제, 에너지 전환을 포함한 조치를 정책에 포함함
    - 다만, 최근에는 농업 수익성 악화와 농촌의 구조변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면서, 정책 우선순위를 다시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함
    - (크로아티아) 현재의 글로벌 충격이 에너지 위기와 생활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응해 에너지 비용 보전과 재생에너지 지원 패키지를 시행했다고 설명함
    - 특히 농업인과 어업인처럼 농촌에서 활동하는 계층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고, 중소

기업도 가격 지원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언급함

- 또한 취약한 지역, 특히 인구구조가 많이 변한 농촌지역을 위해 가계의 에너지 자급과 재생에너지 확산에 큰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힘
- 요컨대, 크로아티아의 비도시지역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다자협력과 지역·국제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경제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유럽연합, EU) EU는 2028-2034 예산안에서 위기 대응을 위한 단일기금·단일계획 접근과 새로운 우선순위 영역에 자금을 배분하는 유연성을 강조함
- 구체적으로 비도시지역을 명시한 목표 설정, 비도시지역의 지출 목표 10% 달성, 지역통합개발전략을 포함한 비도시지역 맞춤형 도구 상자 마련 등을 제안함
- 또한 국가·지역 차원의 비도시지역 전략을 통해 삶의 질, 서비스 제공, 지역격차 완화, 일자리 창출을 통합적으로 다루고, EU 동부 국경(폴란드와 연계)에 더 많은 투자를 촉구함
- (스웨덴) 최근 군사·민간 국방 예산이 크게 늘고, 축소됐던 방위부대가 재강화되면서 비도시지역 정책에 대비태세가 처음으로 포함됐다고 밝힘
- 올해 3월에 제출된 비도시지역 정책 법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의 역할이 강조됐으며, 특히 농촌 마트와 커뮤니티센터에 백업전원 등 대비시설 지원이 확대되었음을 발언함
- 더불어 에너지 가격 상승 대응으로는 가계 에너지 비용 지원과 휘발유·디젤세 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며, 비도시지역 거주자도 이에 포함된다고 설명함
- (네덜란드) 본국은 고도로 도시화한 국가로, 주요 생태학적 도전이 비도시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자평함
- 이에 OECD 비도시지역 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농업과 비도시지역 정책을 연결하고 있으며, 도시·비도시 차별화와 장소 기반 정책이 OECD 작업계획에 포함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더불어 도시와 비도시의 구분 없이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는 네덜란드의 입장을 재강조함
- (일본) 일본 정부는 2025년 농업·식품 정책을 국가안보 핵심 국내정책으로 격상시키며, 식량 공급 안정, 공급망 연속성, 위기 상황 회복력을 강조함
- 비도시지역 주민과 농민은 에너지·연료·비료 가격 폭등과 공급 불안정에 직면해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유류비 완화 대책, 상담체계 구축, 에너지 집약 농가 지원을 시행하고 있음을 설명함
-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효율 인프라 투자, 공급망 다변화, 순환경제 촉진, 식량안보 강화를 추진하며, OECD 작업계획에서 공공·민간 투자, 생산성, 혁신, 비도시지역 연

계, 자연 자원을 주요 키워드로 강조함

- (이탈리아) 농촌 주민의 에너지 공급·바이오매스 대체에너지, 주거문제 해결 강조, 사회혁신·원격지 서비스·교통 정책 협력을 요청함
- (프랑스) 농업·어업 지원으로 식료품 가격 상승 억제, 비료·디젤 비용 지원 등 신속 대응으로 가계 부담 완화에 집중하고 있음을 설명함
- (스페인) 식품 가격 상승 방지를 위해 농업·어업·비료·특별 디젤 지원, 위기 확산 방지에 정책을 집중하고 있음을 발언함
- (코스타리카) 지정학적 충격으로 농촌 취약성 증가, 기반시설·서비스 강화와 경제다각화로 대응, 1억4천만 달러 예산 집행과 같은 현안 해결 경과를 설명함
- (한국) 농촌소멸·인구감소·에너지가격 급등 대응, 기존의 비도시지역 활성화 정책과 데이터센터·녹색에너지 결합 전략 추진 방향을 설명함

(3) [Item 3] 경제적 축(economic pillar) 관점 - 비도시(농촌, Rural)지역 개발을 위한 광업, 데이터 센터 및 관광 분야의 혁신 (11:45-12:45)

● 비도시정책 작업반장 회의 재개 발언

- OECD가 비도시지역의 발전을 경제, 사회, 생태라는 세 축의 균형 관점에서 구성하고 있으며,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 회의 진행을 알림
- 핵심 문제의식은 외부 투자가 농촌지역에 들어올 때, 농촌이 이를 어떻게 활용해 최대의 이익을 얻고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으로 연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임
- 구체적으로 세 가지 외부 투자 사례가 제시함
  - \* 첫째는 광업으로, 광업지역과 농촌발전 간의 관계에 대해 기존에도 오래된 논의와 작업이 있었음을 언급하였고, 둘째는 관광으로, 관광 역시 농촌지역에 유입되는 외부투자의 한 형태이며 다른 작업반과의 협력이 필요한 비교적 새로운 논의 영역으로 소개하였으며, 셋째는 데이터센터로, 매우 새로운 사례이지만 농촌지역으로 들어오는 외부투자라는 점에서는 같은 논리로 접근할 수 있다고 설명함
- 회의 진행은 비도시지역 작업반의 주제 발표와 호주와 코스타리카가 주요 발표를 중심으로 대표단의 발언을 청취할 것을 안내함

● 비도시정책 작업반의 경제적 축(economic pillar) 관점에 관한 발제

- 발표 내용은 네 가지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의 주요 내용을 요약함
- 첫째, 비도시지역의 변화와 경제적 가능성
- 먼저 비도시지역의 인구감소 문제를 언급하면서도, 인구감소가 곧바로 경제 쇠퇴를

-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함
  - 일부 원격 비도시지역이나 중소도시 인접 농촌지역은 인구가 줄고 있음에도 GDP나 생산성 측면에서는 성장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을 밝힘
  - 따라서 비도시지역을 평가할 때 단순히 인구지표만 볼 것이 아니라, 생산성, 산업구조, 자원 활용, 지역 내 가치창출 능력을 함께 봐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시함
  - 둘째, 외부 투자를 지역발전으로 연결하는 문제
  - 비도시지역의 자원과 외부 투자가 단순히 “추출”되는 방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함
  - 구체적으로 광물, 산림, 에너지, 데이터센터, 관광과 같은 자산은 농촌지역에 입지하지만, 그 편익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면 주민에게 실질적 이익이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함
  - 따라서 외부 투자를 지역기업, 지역노동시장, 지역서비스, 지역 인프라, 지역사회 목표와 연결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함
  - 셋째, 광업지역의 기회와 부정적 외부효과
  - 외부 투자와 관련한 사례로 광업지역을 꼽아 설명함
  - 즉, 광업지역은 GDP가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지만, 그만큼 부정적 외부효과도 크다고 밝히며 광업이 지역경제에 높은 임금과 투자를 가져올 수 있지만, 동시에 소득 불평등, 급격한 경기변동, 생활비 상승, 다른 산업의 인력 유출, 환경오염, 지역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함
  - 넷째, 데이터센터라는 새로운 외부 투자 유형
  - 데이터센터를 새롭게 부상하는 외부 투자 유형으로 제시함
  - 데이터센터 투자는 2022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토지비용, 규모 확대, 에너지 수요 등의 이유로 농촌지역에 입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함
  - 데이터센터가 중형 공항만큼 큰 규모로 조성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비도시지역에 상당한 공간적·경제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함
- 호주와 코스타리카 사례 발표
    - (호주) 광업과 재생에너지의 관계를 설명하는 사례로 발언함
    - 호주는 광업회사들이 재생에너지 투자의 주요 동력이 되고 있다고 설명하였고, 이는 광업이 단순히 환경 부담을 발생시키는 산업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적절히 관리될 경우, 재생에너지 투자와 지역 인프라 개선을 촉진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도 있음을 설명함

-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는 비도시지역 개발을 단순한 부문 정책이 아니라 국토·지역 차원의 전략적 과제로 보고, 관광·혁신·제도적 지원을 통해 비도시지역 경제를 다각화하는 정책을 설명함
  - 그간의 추진 경과에 따르면 비도시지역 경제의 다각화는 단순한 개별 사업 지원만으로는 어렵고, 투자, 혁신, 인프라, 지속가능성을 함께 조정할 수 있는 포괄적인 영토적 비전과 적절한 공공 제도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더불어 비도시지역 개발을 지역적, 부문별 이슈로 보아서는 안 되며 사회적 결속, 환경적 지속가능성, 지역 번영을 위한 전략적 우선순위로 다뤄져야 한다고 설명함
- 주제 (Item) 관련 대표단 주요 발언
    - (칠레) 칠레의 광업회사는 재생에너지 생산과 연계되어 있으며, 담수화 시설을 통해 산업에 필요한 물뿐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깨끗한 물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함
    - 이는 광업 프로젝트가 지역사회에 부담만 주는 것이 아니라, 물 공급이나 에너지 인프라 같은 지역 편익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발언함
    - (모로코) 칠레와 함께 광업회사, 재생에너지, 담수화 시설의 결합 사례로 발언함
    - 모로코에서도 광업과 재생에너지 생산이 연결되고 있으며, 담수화 시설을 통해 산업과 지역사회 모두에 깨끗한 물을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함
    - (미국) 데이터센터가 새로운 비도시지역 투자 흐름이라고 설명하며, 미국 내 데이터센터 투자가 2022년 이후 두 배로 증가했으며 향후 더 많은 데이터센터가 비도시지역에 입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함
    - 그 배경으로 토지 비용과 대규모 부지 확보 가능성을 언급하며,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데이터센터가 점점 더 대형화되고 있고 그 규모가 중형 공항에 비견될 정도라고 설명함
    - (노르웨이) 광업 관련 정책 추진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기존 연구, 국제회의, 향후 회의 일정을 바탕으로 작업 중인 현황을 설명함
    - (스웨덴) 데이터센터와 같은 대규모 투자사업을 지역사회와 연결하기 위해 조달, 지역 고용, 커뮤니티 인프라, 환경 모니터링, 지분 참여, 정부와의 협약, 토지이용계획, 경제 다각화와 같은 장치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함
    - (한국) 한국 역시 비도시지역의 인구감소와 경제활력 저하라는 비슷한 과제를 겪고 있으나 유럽 여건과 달리 광업 기반은 약하고 관광도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고 설명함
    - 대신 재생에너지 확대와 IT 산업 성장을 비도시지역의 새로운 경제 성장의 기회로 보고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데이터센터를 연계한 지역활성화 모델을 추진이라고 발언함

(4) [Item 4] 사회적 축(social pillar) 관점 - 인구 변화 관리 및 사회적 경제의 역할 (14:00-15:00)

- 비도시정책 작업반의 사회적 축(social pillar) 관점에 관한 발제
  - 사회적 축 논의의 출발점으로 비도시지역의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를 설명함
  -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최근 작성된 OECD의 자발적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역별 인구 변화가 어디에서 발생하고 어떤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지를 분석했다고 소개함
  - 분석에 활용한 두 가지 OECD의 틀을 다음과 같이 설명, 하나는 지역을 대도시권, 도시 인접 농촌지역, 원격 농촌지역으로 구분하는 확장된 지역 유형 분류이고, 다른 하나는 인구 변화의 방향과 강도에 따라 지역을 분류하는 '축소지역' 분석 틀로 설정함
  - 두 가지 틀을 결합하면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유형의 지역에서 감소가 더 심각한지,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비교할 수 있다고 설명함
  - 분석 결과, 인구감소는 대도시권보다 비도시지역에서 훨씬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OECD 지역 중 약 5분의 1이 인구감소를 겪고 있지만, 대도시권에서는 약 10곳 중 1곳만 감소한 반면, 비도시지역은 4곳 중 1곳 이상이 인구감소를 경험하는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심각한 인구감소를 겪는 지역 대부분이 비도시지역이며, 고강도 인구감소 지역의 약 90%가 비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다고 설명함
  - 다만 모든 비도시지역이 같은 방식으로 쇠퇴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비도시지역 중 상당수는 아직 중간 수준의 인구감소 단계에 있으며, 이는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정책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
  - OECD 전체 인구에서 비도시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30% 미만이지만,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는 비도시지역 거주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고강도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농촌 거주자의 비중이 훨씬 높게 나타남
  - 인구감소의 원인도 지역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났으며, 원격 비도시지역에서는 지속적인 인구 유출, 즉 이주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드러남
  - 반면 도시와 가까운 비도시지역에서는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에 따른 자연 감소가 더 중요한 원인으로 나타났고, 대도시권은 이주와 자연변화가 함께 작용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비도시지역보다 인구 측면에서 더 회복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함
  
- 스페인과 루마니아 사례 발표

- 해당 주제에서는 OECD가 현재 스페인과 루마니아에 지원 중인 두 개의 프로젝트를 소개함
  - (스페인)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있으며, 특히 비도시지역 영향평가 관점에서 국가 인구전략을 개정하고 있다고 설명함
  - 이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는 비도시지역의 고용, 서비스 제공, 경제 다각화를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점점 더 인정받고 있다고 발언함
  - (루마니아) 인구감소, 노동력 부족, 지역 간 격차 등 더 심각하고 급박한 농촌 문제에 대응하는 데 초점두고 있다고 설명함
  - OECD는 유럽연합의 향후 정책 틀과 연계해 국가 차원의 새로운 정책 설계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스페인과 루마니아 사례는 비도시지역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증거 기반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종합함
- 주제 (Item) 관련 대표단 주요 발언
    - (슬로바키아) 사회적 경제와 농업을 연결하는 지역 사례를 소개함
    - 중앙 정부가 주도하여 추진 중인 “Farmer”라는 지역 조달 initiative를 언급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를 공공 식품 공급 체계 안에 편입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함
    - 해당 사업은 단순한 행정적 구매 절차가 아니라, 공공조달을 지역경제 거버넌스와 농 식품 공급망 단축의 수단으로 재구성하려는 접근이라고 설명함
    - 또한 슬로바키아에서는 노동·사회·가족부뿐 아니라 농업·농촌개발부와 학계도 사회적 농업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사회적 포용을 주제로 한 국제회의도 개최하고 있다고 발언함
    - (유럽연합, EU) 사회적 경제와 비도시지역 정책의 연계를 강조함
    -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사회적 경제가 지역적 관점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으며, 사회적 경제 행동계획 검토와 비도시지역 행동계획, Rural Pact, 세대교체 전략 등과 연결되고 있다고 설명함
    - 특히 사회적 농업은 농업 분야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고, 사회적 경제가 비도시지역 회복력뿐 아니라 산림 분야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발언함
    - (리투아니아) 비도시지역의 빠른 변화가 안정적인 경제활동, 필수서비스, 청년세대를 위한 장기 전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지적함
    - 농업은 단순한 식량 생산을 넘어 토지관리, 지역공동체 유지, 세대 간 연속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함
    - 또한 공동농업정책이 농가소득, 투자, 세대교체, 지역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면서, 사회적 경제와 지역공동체 기반 initiative는 돌봄, 이동성, 서비스, 협력, 지역창업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발언함

- 다만, 향후 정책 구조가 이러한 지원을 약화시키면 농촌의 사회적 지원과 지역 생존력 간 통합적 연계가 약해질 수 있다고 의견을 덧붙임
- (이탈리아) OECD 인구감소 분석 결과의 통계적 해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
- 특히 고강도 인구감소 지역 10곳 중 9곳이 비도시지역이라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도시기능권 (Functional Urban Area, FUA)에 가까운 비도시지역이 원격 비도시지역보다 더 강한 인구감소를 겪는 것으로 나타난 부분은 이탈리아의 경험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함
- 덧붙여 이탈리아는 대도시에 가까운 농촌지역은 일반적으로 원격 농촌지역보다 인구 감소가 덜하다고 보며, 해당 수치와 분류 방식에 대한 통계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청함
- (크로아티아)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부를 설립했다고 소개함
- 인구 규모가 작기에 인구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2033년까지의 인구 활성화 전략을 채택했다고 설명함
- 이 전략은 가족과 청년을 위한 환경 조성, 경제적 기반 강화, 균형 있는 인구 이동을 주요 목표로 하며, 양육지원, 경제 강화, 중앙정부와 지역정부 간 협력 등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고 밝힘
- 농촌의 삶이 도시 노동시장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과 투자, 구체적 조치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함
- (일본) 비도시지역과 농업 양쪽 관점에서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것이 인구문제 대응에 필수적이라고 발언함
- 일본의 비도시지역에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학교 통폐합, 주유소와 소매점 등 기본서비스 상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농촌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킨다고 설명함
- 특히 일본 농업은 지역공동체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관개시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에, 비도시지역 공동체가 약화하면 농업생산 유지도 어려워진다고 지적함
- 이에 따라 일본 비도시지역 정책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간 협력을 통한 사회서비스 유지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공공부문의 역량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민간 파트너십도 중요하다고 강조함

(5) [Item 5] 환경적 축(environmental pillar) 관점 - 산림 및 농촌(비도시지역)  
개발 계획 (15:00-16:00)

- 비도시정책 작업반의 환경적 축(environmental pillar) 관점에 관한 발제
  - 해당 발제는 최근 몇 달 동안 비도시정책 작업반에서 추진한 산림과 농촌발전에 관한 대화, 사례연구, 데이터 분석, 보고서 작업에 대해서 설명함
  - 일련의 과업은 비도시 정책 형성에 필요한 근거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국제적 정책 교류와 기준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함
  - 이어진 발제에서 산림은 OECD 회원국 내에서도 매우 불균등하게 분포한다고 설명함
  - 호주, 캐나다, 미국 세 나라가 OECD 전체 수목 피복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며, 국가 간 차이뿐 아니라 한 국가 내부의 지역 간 차이도 크다고 언급함
  - 특히 산림이 많은 지역은 대체로 농촌지역이며, 원격 농촌지역이 산림자원의 중요한 공간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함
  - 더불어 경제적 측면에서는 산림 부문의 부가가치가 지난 20년간 전체 경제와 함께 성장해 왔다고 설명함
  - 다만, 산림의 가치는 직접적인 임업 부가가치만으로는 충분히 포착되지 않으며 다른 산업으로 이어지는 간접효과와 파급효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함
  - 또한 산림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다른 부문에도 추가적인 경제활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지역 단위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함
  
- 일본과 라트비아 사례 발표
  - (일본) 시즈오카, 아이치, 히로시마 등 세 개 현을 방문한 결과를 소개함
  - 일본은 남북으로 길게 뻗은 지리적 특성과 다양한 기후대를 가진 국가이며, 비도시지역의 인구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동시에 일본은 국토의 약 3분의 2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고,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산림 비중이 높은 국가라고 설명함
  - 일본의 산림 관련 정책은 세 가지 정책 영역이 중요하다고 주장함
  - 첫째, 비도시지역 토지이용계획으로 농업 인구 고령화와 농지 유지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산림은 유휴농지나 농촌 토지의 새로운 활용 가능성이 될 수 있으며, 경제 다각화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함
  - 둘째, 공공-민간 파트너십입니다. 탄소중립과 SDGs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민간 부문이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
  - 셋째, 산림의 다기능성으로 산림은 재해예방, 수자원 관리, 생태계 서비스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유지하려면 관련 이해관계자와 지역주민이 산림관리에 참여해야 한다고 설명함

- (라트비아) 올해 2월 현장 조사를 통해 정부, 학계, 민간부문, 산림협회, 연구기관, 산업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만난 내용이 소개함
- 당시 방문지는 리가와 여러 지역 현장이었으며, 목재 시험시설, 산림·목재제품 연구 개발기관, 국유림 연구기관, 합판 수출기업, 기술학교 등을 방문했다고 설명함
- 라트비아는 산림과 바이오경제를 통해 경제적 잠재력을 높이는 방안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발언함
- 더불어 산림 부문이 일자리 창출, 부가가치 확대, 산림 관련 상품과 서비스 혁신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산림 부문은 고용, 공공재 제공, 농촌공동체 편익 측면에서도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함

● 주제 (Item) 관련 대표단 주요 발언

- (스웨덴) 프랑스와의 산림협력 배경을 바탕으로 스웨덴과 프랑스는 모두 유럽의 중요한 산림 국가이지만, 산림 조건과 산업구조가 다르다고 발언함
- 프랑스는 수종 다양성이 크나 산림 산업의 경제적 비중은 스웨덴보다 낮고, 스웨덴은 산림산업과 협동조합 전통이 강한 국가라고 비교 설명함
- 스웨덴은 두 나라 모두 산림의 75% 이상이 민간 소유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소유구조가 산림관리 방식과 자원조달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함
- 또한 프랑스가 현재 겪는 기후변화 영향은 스웨덴이 10-15년 후 직면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스웨덴은 프랑스의 대응 경험에서 배우고 있다고 언급함
- 스웨덴은 특히 프랑스의 다양한 수종과 목재 특성이 연구·혁신에 큰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평가함
- (프랑스) 스웨덴과의 협력이 양국 대사관의 지원과 정치적 협력 흐름 속에서 발전했다고 설명하며, 양국 협력은 에너지, 방위, 산림이라는 세 축 가운데 산림을 중요한 협력 분야로 삼고 있다고 언급함
- 스웨덴과의 협력의 세 가지 축은 첫째, 신기술 활용 둘째,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와 기후변화 적응 셋째, 유럽 차원의 규제 간소화로 요약함
- 더불어 산림관리와 관련한 유럽 정책이 지나치게 복잡해지지 않도록 실제 현장의 문제와 연결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함
- (슬로바키아) OECD 사무국과 환경국, 무역·농업국 간 협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산림 이니셔티브에 더 많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함

- 산림은 환경적 관점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관점에서도 중요하므로, 부문 간 협력의 지속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이탈리아) 산림 연구가 에너지 전환 정책과 더 긴밀히 연결될 수 있다고 제안함
- 에너지 위기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산림 바이오매스를 재생에너지로 활용하는 가능성을 더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함
- 이를 위해 산림 내 바이오매스가 얼마나, 어디에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에너지 생산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함
- (핀란드) 산림과 바이오경제가 자국에 매우 중요한 산업 분야라고 강조함
- 산림전략과 지역 산림프로그램은 산림의 여러 목표를 균형 있게 조정하는 기능적 도구라고 설명하였고, 국가 산림전략은 산림으로부터, 그리고 산림을 위해 더 많은 웰빙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사람, 경제, 환경의 요구를 함께 조화시키는 전략이라고 설명함

(6) **Item 6** 비도시(농촌, Rural)-도시 연계 및 주택: 농촌 개발을 위한 기회  
(16:30-17:30)

- 비도시정책 작업반의 Item 6 의제 소개 및 참석 회원국 간 그룹 토의 진행
  - Item 6은 두 가지 새로운 쟁점을 다루는 순서로 소개함
  - 첫 번째는 비도시-도시 연계이고 두 번째는 주택에 관한 쟁점 논의라고 설명하였고, 비도시-도시 연계는 완전히 새로운 주제는 아니며 작업반과 관련 부서가 오랫동안 다루 온 의제라고 설명함
  - 그러나 여전히 지속 가능한 비도시지역 개발을 위한 중요한 정책 지렛대이며, 도시와 비도시 간 상호작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향후 비도시지역 정책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강조함
  - 두 번째 쟁점인 주택에 대해서는 최근 몇 년 사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고 설명함
  - 과거에는 주택이 주로 도시 문제로 인식되었지만, 이제는 비도시지역에서도 중요한 정책 문제가 되었다고 언급함
  - 특히 주택 문제는 다음 작업계획과 예산 초안에도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 부담가능성, 공실 문제, 지역 회복력과 연결되는 핵심 과제로 제시함
- 의제에 대한 간단한 소개 후 참석 회원국 중 온라인 참석 회원국과 오프라인 참석 회원국별로 그룹 토의를 전개함

- 그룹 토의는 발표 형식이 아니라 참석 회원국 간 관련 경험과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한 상호 교류적 논의로 진행함
- 그룹 토의 중재자는 참석 회원국에게 각국의 두 가지 쟁점과 관련한 일상적인 정책 경험, 현장에서 마주하는 도전과제, 가능한 해결책을 상호 공유하는 형태로 논의를 전개함
-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작업반의 계획과 예산을 보다 구체적인 정책 수요에 맞게 다듬으려는 목적에 방점을 두고 그룹 토의를 진행함
- 주제별로 진행한 그룹 토의는 먼저 농촌-도시 연계에 관한 논의 후 두 번째 쟁점인 주택에 관해 논의함
- 그룹 토의 중재자는 비도시-도시 연계 그룹에서는 OECD가 향후 이 분야에서 어떤 구체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지 논의하도록 했고, 주택 그룹에서는 농촌지역에서 주택 문제가 왜 중요한지, 장소 기반 접근이 왜 필요한지, 부담가능성과 공실 문제를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 논의하도록 안내함
- 그룹 토론 결과, 중재자는 비도시-도시 연계와 관련해 기능적 비도시지역과 기능적 도시지역을 분석하는 방법론을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파악함
- 구체적으로는 행정구역만을 기준으로 농촌과 도시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권과 기능적 연계를 바탕으로 지역을 이해하려는 접근 방법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룹 토의의 시사점을 도출함
- 이와 관련하여 OECD의 Rural Observatory는 앞으로 기능적 도시지역과 기능적 비도시지역을 모두 활용한 여러 분석 자료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언급함
- 그룹 토의 결과를 요약하면, 비도시정책 작업반은 이 부분에서 비도시지역 개발의 새로운 기회와 과제로 비도시-도시 간 기능적 연계 강화와 비도시지역 주택 문제 대응을 주요 의제로 정리함
- 즉, 비도시-도시 연계는 지속가능한 비도시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렛대이며, 주택은 농촌의 정주 가능성, 인구유지, 지역회복력과 직결되는 핵심 의제로 정의함

(7) [Item 7] 비도시(농촌, Rural)지역 일상 시스템: 패턴과 추세 (17:30-17:45)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재정 지원을 받아 수행된 “서비스 제공을 통한 농촌 일상생활권 정의”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업데이트를 제공함
- 해당 프로젝트는 비도시정책 작업반의 제31차 회의에서 지역 지표 작업반과의 공동 세션을 통해 OECD 회원국 대표단에 최초로 소개되었으며, 이후 동일 작업반 제32차 회의에서도 논의함

● 프로젝트 추진 경과의 주요 내용

- 해당 의제는 OECD의 2024년 보고서 「Getting to Services in Towns and Villages」와 유럽위원회 JRC의 「Defining Functional Rural Areas」 작업과 직접 연결됨
- 두 작업의 공통된 핵심은 비도시지역을 단순한 행정구역이나 인구밀도 기준으로 보지 않고,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동하며 서비스에 접근하는 생활권, 즉 “비도시지역 일상 생활권”으로 정의하려는 데 있음
- 이러한 접근은 도시권을 정의할 때 사용되는 기능적 도시지역, 즉 Functional Urban Areas에 대응하는 비도시지역 개념을 만들려는 시도임
- 본 프로젝트가 설계한 방법론의 핵심은 비도시지역의 중심이 되는 마을이나 소도시를 기준으로 주변 지역을 묶는 것으로, 기능적 비도시지역이 적어도 하나의 마을 또는 소도시를 포함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2만 5천 명 이상의 인구를 포함하되, 인구가 매우 희박하고 1시간 이내에 다른 중심지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한 것이 주요 내용임
- 또한 해당 방법론은 이동시간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상호 30분 이내 거리에 있는 마을과 소도시는 하나의 농촌 생활권으로 묶고, 60분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같은 생활권으로 보지 않는 방식임
- 이러한 방법론을 바탕으로 비도시정책 작업반은 생활권 관점에서 서비스 접근성을 분석하였고, 정주지의 규모, 자동차 또는 대중교통으로 도달 가능한 이동시간, 그리고 보건, 금융, 교육 등 공공 및 민간 서비스의 입지를 함께 보아야 지역발전 정책을 제대로 설계할 수 있는 프레임을 구성함
- 주요 발견은 비도시지역 주민의 서비스 접근성이 단순히 “도시와 멀다”는 문제만은 아니며 같은 규모의 비도시지역 내 마을이라도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주변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경우는 은행, 학교, 약국, 병원 등 서비스가 더 많이 입지하는 경향이 있음
- 반대로 대도시 가까이에 있는 소규모 마을은 도시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부 서비스가 더 큰 중심지로 흡수되어 지역 내부 서비스 기능이 약해질 수 있음
- 이에 따라 빠른 도로망이 외부 수요를 끌어올 수도 있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작은 마을을 지나쳐 더 큰 정주지로 이동하게 만들어 지역 서비스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함
- 해당 프로젝트는 인구 변화도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었으며, 최근 10년 동안 유럽의 대도시는 인구가 증가하였으나 비도시지역 내 마을과 소도시 상당수는 인구감소를 경험했고, 특히 동유럽 지역에서 감소가 두드러졌다고 설명함

- 요컨대, 프로젝트의 최신 논의는 비도시지역을 행정 경계가 아니라 일상적 서비스 이용권으로 정의하려는 작업의 마무리 단계에 있음
  - 이는 비도시지역 쇠퇴, 고령화, 서비스 축소, 교통 접근성 문제를 하나의 일관된 분석의 틀 안에서 다루기 위한 방법론을 확정하는데 집중하고 있으며, 향후 비도시지역 정책은 생활권 단위의 데이터, 서비스 입지, 교통 연결, 지역 중심지 기능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언급함
- 주제 (Item) 관련 대표단 주요 발언
    - 해당 의제는 “기능적 농촌지역” 및 농촌 일상생활권에 관한 프로젝트 추진 현황을 간단히 정리하여 업데이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됨
    - 이러한 여건으로 회원국 대표단에게 해당 분석 작업에 대해 서면으로 최종 의견을 제출하도록 안내함
    - 회원국 대표단은 프로젝트의 방향성과 최신 추진 사항에 특별한 이견이나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음
    - 다만, 향후 프로젝트의 최종 성과를 기대하고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도록 독려한다는 방향으로 종합하며 의제 논의를 마무리함

(8) [Item 8] 회의 폐회 (17:45-18:00)

- 향후 비도시정책 작업반의 추진 업무와 관련 활동 보고서 초안에 대해 안내함
  - 회의 중 작업반 관계자는 “2025-2026년 활동 보고서 (2025-2026 Activity Report)” 초안을 배포함
  - “활동 보고서”는 시범적 성격의 자료이며, 작업반에서 진행 중인 여러 활동을 체계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함
  - 회원국 대표단에 보고서의 길이, 구성, 내용에 대해 서면 의견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으며, 향후 대표단의 환류 결과까지 반영해 이 자료를 정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함
  - 마무리로 비도시정책 작업반장은 회원국 대표단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를 표하였고, 이번 회의가 내용적으로 풍부하고 밀도 있게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이 많은 것을 배우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었을 것이라고 평가하며 회의를 마무리함

## 제52차 지역개발정책위원회(RDPC) 회의(1일차)

### 1. 회의명

- 제55차 지역개발정책위원회 (Regional Development Policy Committee) 회의 (Day 1)

### 2. 일시 및 장소

- 2026년 4월 22일 (수), 9:30 ~ 18:00
- OECD Room CC10

### 3. 참석자

- OECD 회원국
-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 이주열 국장
- 국토교통부 국제협력통상담당관 권유정 과장
- 국토교통부 국제협력통상담당관 박상우 사무관
- 국토교통부 국제협력통상담당관 한준수 주무관
- 국토교통부 국제협력통상담당관 문성윤 자문관
- 국토교통부 신도시정비지원과 김종성 과장
-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박정규 사무관
-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정예은 주무관
-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양은모 부연구위원
-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신서경 부연구위원
- OECD 사무국 이랑 과장
- 주OECD대표부 김남균 참사관

#### 4. 주요 주제

- 개회 및 논의 배경 설정
- RDPC 운영 권한(Mandate) 개정 및 갱신
- RDPC 2027-2030 업무계획 및 예산(PWB) 초안
- 지역발전, 안보 및 국방
- OECD 지역발전: 전환 관리, 지역 격차 및 정책적 상충관계 대응
- 정부 수준 간 인프라 투자: Compass 및 OECD-유럽지역위원회(CoR) 공동조사

#### 5. 주요 논의내용

##### (1) [Item 1] 개회 및 논의 배경 설정 (09:30-10:00)

- WPURB 의장
  - 의장인 Peter Berkowitz가 제55차 Regional Development Policy Committee 회의를 개최함. 안건(CFE/RDPC/A(2026)3/REV1)을 소개하고 대표단의 승인을 요청함
  - 이후 OECD Centre for Entrepreneurship, SMEs, Regions and Cities 국장인 Lamia Kamal-Chaoui가 최근 주요 활동 현황과 함께, RDPC가 CFE 및 OECD 전체 업무에 기여한 내용에 대한 개요를 설명함
  - \* 기초발언을 통해 「중기 경제 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을 인용하며 세계경제의 회복탄력성 현황을 설명함
  - \* 2026년 세계 GDP 성장률은 2.9%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인플레이션은 에너지 가격 압력 완화에 따라 2026년 4.0%에서 2027년 0.7%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됨을 공유함
  - \* 또한 이러한 거시경제적 충격이 지역별 산업구조와 에너지 의존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다 정교한 지역정책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함
  - 아르헨티나·브라질 등 OECD 가입 후보국과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파트너국들이 참석하여 지역정책 논의의 국제적 중요성이 재확인됨
  - 회의는 비공개 원칙 하에 진행되었으며, 다자간 정책 조율을 위한 행정 공지와 온라인 참석자를 위한 기술적 운영 지침이 승인됨
  - 이번 회의는 2027-203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PWB)의 전략적 방향 설정을 주요 목표로 진행됨

- 특히 '실질 제로 성장(Zero Real Growth)' 시나리오에 따른 재정 제약 상황 속에서, 위원회의 지속가능성과 정책 영향력 확보를 위해서는 명확한 우선순위 설정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강조됨. 아울러 이러한 논의가 RDPC 위임사항(Mandate) 갱신 과정의 주요 전략적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공유됨

## (2) [Item 2] RDPC 운영 권한(Mandate) 개정 및 갱신 (10:00-11:00)

- WPURB 의장
  - Regional Development Policy Committee 및 산하 작업반의 권한(Mandate)은 OECD 이사회(Council) 결정에 따라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되었음
  - OECD 이사회는 RDPC에 2026년 6월 30일까지 새로운 권한 갱신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5년 단위 권한 개정 및 갱신 논의가 단계적으로 진행됨
  - 첫 번째 논의는 2025년 12월 3일 RDPC 회의에서 이루어졌으며, 이후 수정안은 2026년 2월 4일과 2026년 3월 20일 두 차례의 온라인 임시회의(ad hoc meeting)를 통해 추가 검토됨
  -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회 및 산하 작업반 권한의 개정안(CFE/RDPC (2025) 29/REV3)에 대한 대표단 승인 여부를 논의하고, 이를 OECD 이사회에 제출하기 위한 최종 조율이 진행하고자 함
- 위원회의 향후 5년을 규정할 위임사항 개정 논의에서는 용어 선택에 내포된 추가적인 정책적 함의를 둘러싸고 회원국 간 정교한 논리 대결이 전개됨
- 특히, '증거 기반(evidence-based)'과 '데이터 주도(data-driven)' 표현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됨
  - 미국: 용어의 중립성과 데이터 활용 확대 필요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주도(data-driven)' 표현 사용을 제안함
  -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반면 이 국가들은 데이터 자체보다 이를 검증(vetting)·해석하는 OECD의 분석 역량이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증거 기반(evidence-based)' 접근 유지 필요성을 주장함
  - 이에 대해 의장은 데이터 활용과 분석 역량 강화를 함께 반영하는 절충안을 제시하며 합의를 유도함
- 성평등 및 불평등 관련 문구에 대해서도 논쟁이 발생함
  - 호주, 콜롬비아, 멕시코: '성별 불평등(gender inequality)' 표현의 명시적 포함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책적 가시성 확보를 주장함

- 영국: 영국 또한 여성과 소녀의 역량 강화 필요성을 지지함
- 미국: 반면 미국은 보다 포괄적 표현 사용을 통해 정책적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함
-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논쟁은 다음과 같음
  -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transition to low-carbon economy)’ 문구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언급함
  - 미국: 에너지 안보 관점을 고려하여 ‘모든 에너지원 활용(all-energy-sources approach)’ 개념을 제안하며 특정 에너지원 중심 접근에 대한 우려를 제기함
- 장시간 논의 끝에 장소 기반 정책(place-based policies) 등 일부 핵심 문구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짐
- 반면, 성평등 및 기후변화 관련 일부 미합의 문구(bracketed text)에 대해서는 OECD 이사회(Council) 차원의 수평적 해결(horizontal solution)에 맡기기로 결정함
- 한편, 산하 작업반(Working Parties)의 위임사항(Mandate)은 전반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승인됨

### (3) [Item 3] RDPC 2027-2030 업무계획 및 예산(PWB) 초안 (11:30-12:45)

- WPURB 의장
  - 사무국은 RDPC 커뮤니티에 공유된 사무총장의 「2027-2030 업무계획 및 예산(PWB) 수립을 위한 위원회 지침(Guidance to Committees)」을 바탕으로 OECD 차원의 주요 우선과제를 설명하고, RDPC PWB 초안이 해당 지침과 어떠한 방식으로 연계되어 있는지 소개함
  - 또한 RDPC 커뮤니티에는 예산위원회(Budget Committee) 의장인 Stephen Jones 대사가 제작한 영상 자료(vodcast)에서 PWB 개혁(PWB Reform)의 배경과 주요 내용, PWB 계획 수립 과정에서 실질위원회(Substantive Committees)가 수행하는 역할 등을 소개함
  - 이번 PWB 초안은 2025년 12월 RDPC 회의에서 논의된 예비 문서 [CFE/RDPC (2025) 32]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으며, 회의 이후 27개 대표단이 제출한 서면 의견 또한 함께 반영될 예정임
  - 수정된 PWB 초안[CFE/RDPC (2025) 32/REV1]은 제55차 회의 이후 대표단에 배포될 예정이며, 승인 절차를 거쳐 예산위원회(Budget Committee)에 제출될 계획임
- 위원회의 실행력을 뒷받침할 2027-30 PWB는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주기를 확대하

고, 5대 핵심 축(Pillar)을 중심으로 구조화됨

- 2027~2030년 PWB는 ▲지역 경쟁력 및 생산성 ▲메가트렌드(인구·기후·디지털) 대응 ▲거버넌스 및 자원 조달 ▲데이터 및 지표 ▲대외 협력 및 글로벌 영향력 등 5대 핵심 축을 중심으로 구성됨

- 위원회는 증거 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 강화를 위해 지역 데이터 포털(Local Data Portal), 지방정부 재정 세계 관측소(World Observatory on Subnational Government Finance), 지능형 공간정보 랩(Geospatial Lab) 등 주요 데이터·분석 플랫폼을 사업계획에 포함함
- 국가별 대표단의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음
  - 한국: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회복탄력성(resilience) 강화를 핵심 우선과제로 강조하였으며, 관련 국가 정책 경험을 적극 공유할 의향을 밝힘
  - 영국: AI 전환이 지역경제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주요 의제로 다룰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생물다양성(biodiversity) 요소의 명시적 반영 필요성을 강조함. 또한 교통 인프라가 노동시장 범위를 확대하고 도시의 '실질적 규모(effective city size)'를 확장시키는 경제적 기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
  - 이탈리아와 프랑스: 지역정책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 '세대 간 형평성(intergenerational fairness)' 관점을 정책 평가 지표에 반영할 필요성을 제기함
  - 유럽연합(European Union): 산업정책의 재강화 흐름 속에서 '체류 권리(Right to Stay)' 전략을 기반으로 한 중소도시 경쟁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함
- 사무국은 이번 PWB 수립 과정에서 수천 건의 보고서를 분류·분석하기 위해 AI 기반 분석 도구(AI-powered tools)를 활용하였다고 설명하였으며,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러한 기술적 혁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 (4) [Item 4] 지역발전, 안보 및 국방 (14:30-15:35)

- WPURB 의장
  - 이번 세션에서는 국방 및 안보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지역의 산업 구조와 지리적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기회와 도전 과제를 함께 검토하고자 함
  - 지정학적 긴장 심화와 분쟁 증가로 인해 글로벌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OECD 회원국들은 국방 및 안보 정책의 전략적 중요성을 재강조하고 국방비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국방 지출 증가는 방위산업 생산, 물류, 국방 관련 혁신 활동이 집적된 지역에는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반면, 사회서비스·교육·보건의료·기반시설 등 지역발전 핵심 분야에 대한 재정 압박을 초래할 가능성도 함께 제기됨
- 또한 다수 국가에서는 적대적 이웃 국가와 인접한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대비태세, 민방위, 인프라 회복력 강화 및 지역 매력도 제고 등을 추진하며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임 [CFE/RDPC (2026) 3]
-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따라 ‘안보(Security)’와 ‘지역 개발(Regional Development)’의 전략적 연계가 이번 회의의 핵심 신규 의제로 부상함
  - 안보-지역 개발 연계 모델 논의: 전문가 Oyin Oladosu-Carson은 Singapore의 ‘총력 국방(Total Defense)’과 Japan의 ‘종합 국가 안보(Comprehensive National Security)’ 사례를 소개하며, 북유럽 중심의 사회적 안보(Societal Security) 개념을 넘어서는 포괄적 방위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함. 특히 국방 지출이 단순한 군사력 증강을 넘어 지역 사회의 신뢰와 사회적 응집성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됨
- 지역별 정책 사례 및 전략에 대한 국가별 대표단의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음
  - 핀란드: 동부 접경지역 폐쇄에 대응하여 지역 활력 유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 경제구역(SEZ) 시범 도입 검토 현황을 공유함
  - 루마니아: 국방 인프라의 민군 겸용(dual-use) 활용을 통해 영토 응집성(territorial cohesion)을 강화하는 정책 논리를 제시함
  - 영국, 튀르키예: 조선업 및 무인기(UAV) 산업 등 국방 산업 생태계를 고속권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SME)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발표함
  - 우크라이나: 전시 상황 속에서도 분권화된 지방정부가 필수 공공서비스를 유지하며 높은 회복력을 보여준 사례를 공유하였으며, 이에 대해 회원국들의 공감과 관심이 이어짐
  - OECD 위원회: 향후 국방 투자가 지역의 ‘지리적 불만(geography of discontent)’을 완화하고 지역 회복력과 통합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에 공감함

(5) [Item 5] OECD 지역발전: 전환 관리, 지역 격차 및 정책적 상충관계 대응  
(15:35-16:30)

- WPURB 의장
  - 이번 세션에서는 OECD 전반에서 수행된 최근 지역개발 관련 연구를 종합적으로 정

- 리한 대규모 재고조사(stocktaking)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됨
- 해당 자료는 회의 이전에 대표단과 공유되었으며, 경쟁력, 산업 전환, 주택 및 인프라 제약, 녹색 전환의 공간적 영향 등 공통적인 도전 과제와 새로운 정책 우선순위를 제시함
- 또한 OECD 정책결정자들을 위한 주요 정책적 시사점도 함께 포함하고 있음 [CFE/RDPC (2026) 4]
- 분석 자료는 정부가 점차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적 상충관계 (trade-offs) 역시 함께 조명함
- 주요 사례로는 ▲혁신을 선도 지역에 집중시키는 것과 기회를 보다 폭넓게 확산시키는 것 사이의 균형 ▲탈탄소화를 가속화하면서도 전환 비용에 취약한 지역을 지원해야 하는 과제 ▲주택 공급 확대와 환경·공간계획 규제 간 긴장 관계 등이 제시됨
- 이번 발표와 RDPC 논의 결과는 향후 6월 최종 확정 예정인 간략 정책 문서 작성 과정에도 반영될 예정임
- 2019년 이후 OECD가 수행한 지역개발 관련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 (stocktaking)한 결과, 정책입안자들이 직면한 주요 전략적 상충관계 (policy trade-offs)가 도출됨
- 사무국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경쟁력, 산업 전환, 서비스 접근성, 녹색 전환, 주거, 국방 등 6대 핵심 테마에 걸친 수천 건의 보고서를 분류·분석함
  - 분석 결과, 지역 격차 해소와 국가적 성장 목표 간 충돌 지점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 것으로 평가됨
- 주요 정책 상충관계로는 ▲혁신 역량을 선도 지역에 집중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것인지, 또는 기회를 모든 지역으로 보다 폭넓게 확산할 것인지의 문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탈탄소화 가속과 탄소 집약 지역 지원 비용 간의 균형 ▲주택 공급 확대와 환경 보호 및 효율적 공간계획 간의 긴장 관계 등이 제시됨
  - 슬로베니아 등 회원국들은 이러한 정책 상충관계를 정교하게 관리하기 위해 데이터의 세분화 (granularity) 필요성을 강조함
  - 특히 ‘지역 간 (across regions)’ 격차뿐 아니라 ‘지역 내 (within regions)’ 격차까지 분석할 수 있는 정밀한 지표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제기됨

(6) [Item 6] 정부 수준 간 인프라 투자: Compass 및 OECD-유럽지역위원회(CoR) 공동조사 (17:00-18:00)

- WPURB 의장

- 사무국은 OECD의 「인프라 관련 업무의 통합 및 연계 강화를 위한 고위급 접근방식 (High-Level Approach, HLA)」, 「지속가능하고 질 높은 인프라를 위한 고위급 원칙 (High-Level Principles, HLPs)」 이행 현황을 설명 [COM/DAF/GOV(2025)1/REV1]
- 해당 원칙안은 2025년 10월과 2026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위원회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향후 회원국 간 추가 논의를 바탕으로 OECD 이사회 권고안(OECD Council Recommendation) 형태로 채택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 \* HLPs는 두 번째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시된 회원국 의견을 반영하여 추가 수정될 예정이며, 이후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공개 의견수렴(public consultation) 절차도 진행될 계획임

- \* 이후 OECD Investment Committee, Public Governance Committee, Regional Development Policy Committee 등 관련 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예정임

- 이번 세션에서는 정부 계층 간 공공투자의 다층적 거버넌스(multilevel governance)를 진단하기 위한 ‘Indicator Compass’ 도구의 최신 개정 내용도 함께 소개됨 [CFE/RDPC(2026)7]

- \* 해당 도구는 「정부 계층 간 효과적 공공투자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on Effective Public Investment Across Levels of Government)」의 12대 원칙을 기반으로 국가 및 지역의 강점과 취약성을 진단할 수 있도록 설계됨

- 아울러 European Committee of the Regions와 공동으로 수행한 지방정부 공공투자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됨 [CFE/RDPC(2026)5]

- \* 해당 조사는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공공투자 과정에서의 주요 애로사항, 역량 제약, 자원 조달 여건 등에 대한 실증자료를 수집·분석한 것임

- 회의 마지막 세션으로서 정책 비전과 현장 집행 사이의 ‘집행 간극(execution gap)’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 도구와 실행 체계가 중점적으로 논의됨

- 핵심 정책도구: 공공투자 지표 컴퍼스(Indicator Compass)

- ‘Indicator Compass’는 「정부 계층 간 효과적 공공투자에 관한 권고」의 12대 원칙을 기반으로 개발된 진단 도구로, 국가별 공공투자 거버넌스의 강점과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해 활용됨

- 포르투갈, 이탈리아: 전략적 조정, 민간 투자 동원 등 일부 항목에서 OECD 평균 대비 높은 성과를 보인 사례를 공유함

- 일본: ‘원칙 2(조정)’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배경에 대해, 일본 특유의 다층적 거버넌스 구조와 재정 개혁 과정을 설명하며 지표 해석 시 국가별 제도적

맥락 고려 필요성을 제기함

- 주택과 인프라의 기술적 정의 및 정책 툴킷

- Nicolas Pino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인프라의 비경합성(non-rivalry)과 비배제성(non-excludability) 원칙을 설명하며, 주택이 전통적인 공공 인프라 정의에서 제외되는 기술적 배경을 소개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United States 등 회원국들은 주택 정책이 지역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의제라고 강조하며, 주택 공급 규제 완화와 비용 절감을 위한 실천적(action-oriented) 정책 툴킷 개발 필요성을 제안함

- 현장 적용 사례 및 향후 추진 방향

- 핀란드: 헬싱키의 무상급식 사례는 포용적 성장 로드맵이 실제 정책으로 구조화·정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소개됨

- 세계지방정부협의회(ICLEI): 지방정부 공무원의 실행 역량 강화를 위한 코칭 프로그램 확대와 데이터 시각화 도구의 중요성을 강조함

## 제52차 지역개발정책위원회(RDPC) 회의(2일차)

### 1. 회의명

- 제52차 지역개발정책위원회 (Regional Development Policy Committee) 회의 (Day 2)

### 2. 일시 및 장소

- 2025년 12월 4일 (목), 9:30 ~ 16:00
- OECD Headquarters CC 06

### 3. 참석자

- OECD 회원국
-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 이주열 국장
- 국토교통부 국제협력통상담당관 권유정 과장
- 국토교통부 국제협력통상담당관 박상우 사무관
- 국토교통부 국제협력통상담당관 한준수 주무관
- 국토교통부 국제협력통상담당관 문성윤 자문관
- 국토교통부 신도시정비지원과 김종성 과장
-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박정규 사무관
-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정예은 주무관
-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양은모 부연구위원
-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신서경 부연구위원
- OECD 사무국 이랑 과장
- 주OECD대표부 김남균 참사관

#### 4. 주요 주제

- [Item 7] 서비스 접근성의 지리적 불균형
- [Item 8] 지자체 간 협력의 극대화(활용)
- [Item 9] 기후 회복탄력성을 위한 수(水)자원 거버넌스
- [Item 10] 부동산 회복탄력성
- [Item 11] 지역 회복탄력성과 재난 관리
- [Item 12] 향후 과업 및 추진 일정 안내, 회의 폐회

#### 5. 주요 논의내용

- 회의 결과 요약\*

\* RDPC 2일차 회의 주제별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요약함.

- 첫째, 서비스 접근성의 지리적 불균형: OECD는 교육, 보건, 약국, 응급서비스 등 필수서비스가 지역별로 얼마나 불균등하게 제공되는지를 분석하는 작업을 소개함
- 단순히 행정구역 기준으로 서비스를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실제 이동, 생활권, 서비스 수요, 접근 시간, 수용 능력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각국은 농촌·고령화 지역의 서비스 부족, 기능적 생활권 분석, 모바일 데이터 활용, 서비스망 최적화의 필요성을 논의함
- 둘째, 지자체 간 협력의 제도화와 활용: 회의에서는 규모가 작은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필수서비스와 인프라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자체 간 협력이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제시함
- OECD는 협력이 행정 효율성, 전문성 공유, 공동 투자, 지역 간 기능적 연계를 강화할 수 있지만, 책임 불명확성, 재정 부담, 대표성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함
- 이에 각국은 협력 법제, 재정 인센티브, 공동 서비스 제공, 광역적 계획 수립 경험을 공유함
- 셋째, 기후 회복탄력성을 위한 수자원 거버넌스: OECD는 물 문제가 홍수, 가뭄, 수질오염, 식수·위생서비스 안정성 등 다양한 위험과 연결되어 있으며, 기후변화와 도시화, 산업 전환, 디지털 인프라 확대 속에서 지역발전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함

- 특히 물은 행정경계를 넘어 흐르기 때문에 유역 단위의 거버넌스, 다층적 조정, 재정·제도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일본, 멕시코, 튀르키예,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등은 자국의 수자원 관리와 기후적응 경험을 제시함
- 넷째, 부동산 및 지역 재난 회복탄력성: 회의 후반부에서는 기후위험이 부동산 가치, 보험 가능성, 금융 안정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함
- OECD는 홍수, 산불, 폭염, 지반 위험 등 장소 기반 위험을 부동산 투자와 도시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세밀한 위험 데이터와 공시, 회복력 있는 건축·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함
- 이어 지역 재난 회복탄력성 플랫폼 논의에서는 재난 대응뿐 아니라 장기적 경제 회복, 지역경제 구조 재설계, 국제적 동료학습과 전문가 동원 체계가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함

- 주제별 (Item) 주요 회의 내용

(1) [Item 7] 서비스 접근성의 지리적 불균형 (09:30-10:30)

- RDPC 의장 발언

- 서비스 접근성의 지리적 불균형을 RDPC에서 책임 있게 다뤄야 할 핵심 주제임을 언급함
- RDPC 작업반은 세 가지 관련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이후 각국이 방법론과 정책 활용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함을 안내함

- 세 가지 프로젝트에 관한 주제 발표 내용

- 첫 번째, “경쟁력 있는 지역을 위한 서비스 네트워크 최적화” 프로젝트를 소개함

- 이 프로젝트는 3년짜리 사업으로, 현재 2년 차에 있으며 학교, 약국, 응급서비스를 중심으로 각국이 서비스 네트워크를 어떻게 설계하고 조정하는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서비스가 사람과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정부의 핵심 수단이지만, 재정 압박, 인구 변화, 디지털 전환, 복잡한 거버넌스 구조 때문에 단일 시설이나 단일 장소 차원에서만 볼 수 없다고 설명함
- 따라서 서비스 제공을 “네트워크”로 보고, 효율성과 접근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가 핵심 과제로 제시함

- 구체적으로 크게 네 가지 내용으로 구성 프로젝트를 구성함
  - \* 첫째, 각국의 서비스 제공 방식과 “최적 서비스 네트워크”의 의미를 정의
  - \* 둘째, 각국이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법·규제·정책수단을 체계적으로 목록화
  - \* 셋째, 각국의 서비스 제공 접근방식을 유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GIS 기반 서비스 네트워크 모형을 구축
  - \* 넷째, 학교 폐쇄와 같은 서비스 네트워크 재조직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 경제학적으로 분석하고, 정부가 지리통계와 공간데이터를 정책결정에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병행 방안 제시
- 두 번째 프로젝트 발표는 서비스 접근성 측정방식을 고도화하는 작업임
  - 기존 분석은 주로 가장 가까운 시설까지의 이동시간을 측정했지만, 이번 분석은 시설의 수용능력과 경쟁 정도까지 함께 고려하려는 것이 특징임
  - 에스토니아와 네덜란드 사례를 통해 보육, 초등교육, 공공고용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격자 단위와 지자체 단위에서 접근성을 분석했다고 설명함
  - 단순 이동시간만 보면 도시의 접근성이 높고 농촌의 접근성이 낮다는 익숙한 결과가 나오지만, 이것만으로는 정책적 결론이 부족하다고 지적함
  - 따라서 시설의 좌석 수나 등록 학생 수 같은 수용능력, 그리고 같은 시설을 이용하려는 다른 이용자와의 경쟁까지 반영해 “경쟁적 접근성”을 산출함
  - 이 분석에서는 지역을 크게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함
    - \* 첫 번째 유형은 이동시간도 길고 시설 경쟁도 심한 지역은 이중 불리함을 겪는 지역이며, 두 번째 유형은 이동시간은 길지만 경쟁은 낮은 지역, 세 번째 유형은 이동시간은 짧지만 경쟁이 높은 지역으로 상충 관계가 있는 지역이라고 발함
    - \* 네 번째 유형으로 이동시간도 짧고 경쟁도 낮은 지역은 접근성과 공급여건이 모두 양호한 지역을 정의함
  - 더불어 네덜란드는 이중 불리함을 겪는 지역의 공간적 편차가 작았지만, 에스토니아는 일부 지자체에서 이중 불리함이 더 두드러졌다고 설명함
  - 또한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항상 해법은 아니며, 시설 수용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교통 접근성만 높이면 더 많은 사람이 같은 시설에 몰려 오히려 경쟁이 심해질 수 있다고 강조함
- 세 번째 프로젝트는 유럽위원회와 협력해 추진한 기능적 농촌지역 및 농촌 일상생활권 정의 작업임
  - 이 작업은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일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지를 바탕으로 농촌 생

활권을 파악하려는 시도의 일환임

- 기존의 행정구역 단위는 국가마다 크기와 구조가 크게 달라 국제비교에 한계가 있고, 기능적 도시지역은 잘 정립되어 있지만 도시지역 밖 공간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함
- 이에 따라 기능적 농촌지역은 TL3보다 작고 지방행정단위보다는 큰 중간 규모의 공간 단위로, 국제 비교 가능성과 지역 분석의 세밀함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도구로 설명함
- 끝으로 발표에서는 기능적 농촌지역 방법론을 노동시장권, 기능적 도시지역, 서비스 입지 기반 접근 등과 비교한 결과를 설명함
  - 사례로는 이탈리아의 인터넷 속도에서 도시-비도시 격차가 중간 규모 공간 단위에서 더 명확히 드러난다는 점, 기능적 비도시지역을 포함하면 외국인 인구 분포나 주택시장 분석이 더 풍부해진다는 점, 독일의 도서지역 기능적 비도시지역이 일반 농촌지역과 다른 주택시장 특성을 보인다는 점, 병원 접근성 분석에서 농촌성 정도와 국가별 밀도 차이에 따라 45분 이내 병원 접근 가능성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제시함
- 소개한 프로젝트는 올해 6월 종료 예정이며, 각국의 국가별 지표를 적용해 기능적 비도시지역 방법론의 정책 활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함
- 주제 (Item) 관련 대표단 주요 발언
  - (스위스) 기능적 농촌지역 지표가 서비스 접근성 문제를 충분히 포착하는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발언함
  - 스위스는 기능적 도시지역에 포함된 농촌지역이 분석에서 제외될 경우, 산악지역과 농촌지역의 실제 현실이 과소대표될 수 있다고 지적함
  - 또한 이 방법론의 주된 목적이 국제비교인지, 아니면 개별 국가 안에서 서비스 접근성을 평가하는 정책도구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언급함
  - 스위스는 이미 상점, 학교, 약국, 대중교통 등 서비스 접근성을 더 세밀한 공간 단위에서 전 국토에 걸쳐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적 농촌지역이 자국의 세부적 지역 특성을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함
  - (포르투갈) 서비스 접근성이 농촌과 전환지역의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발언함
  - 포르투갈은 인구감소, 고령화, 경제활동 부족, 교통 연결성 약화, 공공서비스 접근성 저하가 농촌지역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하였고, 비도시지역 일상생활권과 기능적 비도시지역은 주민의 실제 생활, 이동시간, 이동 제약, 일자리·의료·돌봄 접근성, 교통 취약성, 연령·성별·소득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함
  - 다만 기능지역을 여러 겹으로 추가하면 서비스 조정과 공공정책 운영이 복잡해질 수

있고, 서비스 기능별로 서로 다른 기능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행정구역 기반 자료와 분류를 완전히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 (네덜란드) 과거처럼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접근에서 벗어나, 지역별 필요와 이동성, 서비스 수요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함
- 네덜란드는 지역별로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어떤 이동수단과 접근 방식이 적절한지를 검토해 최적의 서비스 조합을 찾고 있다고 발언함
-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초등학교가 지역사회에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고, 보건의료와 약국 분야에서는 디지털 진료, 온라인 접근성, 고령자의 디지털 이용 가능성 같은 요소도 실제 접근성을 크게 바꾼다고 설명함
- 즉, 접근성은 물리적 거리만이 아니라 디지털 역량, 문화적 이용방식, 서비스 이용 습관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
- (이탈리아) 기능적 비도시지역 방법론에 대해 가장 명확한 문제 제기를 함
- 이탈리아는 기능적 농촌지역을 기능적 도시지역 밖의 잔여 공간처럼 정의하는 것은 도시와 농촌의 상호의존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함
- 또한 인구가 많은 지자체가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가정도 이탈리아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는 항상 맞지 않는다고 설명함
- 특히 기능적 도시지역은 통근 흐름에 기반하고, 기능적 농촌지역은 농촌 중심지까지의 이동시간에 기반한다면 같은 국토 안에서 서로 다른 기준이 병행되는 것이므로 방법론적으로 일관성이 약하다고 평가함
- 이탈리아는 기능지역이 통계 분석을 위한 것인지, 서비스 제공 분석을 위한 것인지 목적을 분명히 하고, 이미 각국이 보유한 국가 기능지리 체계를 유연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함
- (스페인) 접근성 분석이 서비스의 위치만이 아니라 수용능력, 이용자 간 경쟁, 이동수단별 접근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평가함
- 스페인의 관련 사례를 바탕으로 인구감소라는 장기 과제 속에서 공공서비스 접근성, 특히 농촌과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중요한 쟁점으로 제시함
- 또한 분석이 서비스 품질과 비용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 실제 수요를 과대평가할 수 있다는 한계도 지적함
- 학교 접근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통학권, 실제 아동 이동, 대안적 학교 입지, 지속가능 교통수단별 접근성을 비교하는 도구가 국가공간계획 준비 과정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함

- 또한 이동통신 기반 기종점 자료를 활용해 전 국토를 포괄하는 기능지역을 식별한 경협도 공유함
- (한국) 지역 간 서비스 접근성 격차가 인구감소와 급속한 고령화를 겪는 지역에서 중요한 정책 문제라고 발언함
- 한국은 교육, 보육, 의료 같은 필수서비스 접근성이 일부 지역에서 제한적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경계가 아니라 통신데이터 기반의 실제 지역 간 이동 패턴을 분석하는 정책 접근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함
- 이러한 접근은 실제 이용 패턴을 바탕으로 농촌 서비스 수요와 접근성을 더 정확히 파악하고, 교육, 교통, 의료 분야의 서비스 입지와 규모를 보다 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언급함
- 한국은 이 방식이 기능적 생활권을 기준으로 서비스 접근성을 재정의하고, 더 정밀한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을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함
- 또한 2023년 OECD와의 공동연구, 2024년부터 2026년까지 EU 기능적 도시지역 프로젝트에 대한 모바일 데이터 제공, 2026년 OECD와의 추가 공동연구 계획을 소개함
- (프랑스) 방법론의 수학적·기술적 설명이 정책적으로 충분히 이해 가능해야 한다고 지적함
- 프랑스는 방정식이나 지표가 단순히 기술적으로 맞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식이 어떤 정책적 논리와 판단을 압축하고 있는지 설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또한 프랑스처럼 지자체 간 협력체나 행정·정치적 권역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기능적 농촌지역 분석이 이러한 정치적·행정적 조직을 어떻게 고려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평가함
- (코스타리카) 비도시지역 개발청이 최근 갱신한 비도시지역 영토개발 지수를 소개함
- 이 지수는 비도시지역의 공공투자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핵심 도구로, 인프라, 사회적 포용과 형평성, 제도·조직관리, 경제, 생태계 등 5개 차원과 23개 변수를 통해 농촌 영토 간 발전 수준을 비교하였다고 설명함
- 코스타리카는 이 지수를 통해 비도시지역 영토 간 격차를 확인하고, 공공투자 우선순위를 증거 기반으로 정할 수 있다고 설명함
-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지수가 3.9% 개선되었으며, 특히 인프라와 제도·조직관리 차원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밝힘
- 다만 보건, 교통, 도로 연결성 등 서비스 접근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으며, 향후 OECD와 협력해 농촌정책 리뷰를 준비하고 다음 해 농촌회의에서 발표할 계획도 언급함
- (루마니아) 국가 내부의 지방정부 구조가 매우 파편화되어 있어 기능지역 논의가 중

요하다고 설명함

- 루마니아에는 3천 개가 넘는 지방정부 단위가 있고, 그중 상당수가 소규모 단위이기 때문에 중간 수준의 공간 단위가 부족하다고 언급함
- 루마니아는 이미 기능적 비도시지역 확장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그 결과와 방법론을 Secretariat과 공유할 의향이 있다고 밝힘
- (영국) 비도시지역과 해안지역에서 서비스 접근성이 중요한 문제라고 언급함
- 영국은 본 발표 자료를 더 일찍 공유받으면 여러 부처와 기관의 의견을 더 폭넓게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건의함
- 또한 특정 서비스별 사례도 중요하지만, 경찰, 보건 등 여러 서비스 간 외부효과와 통합 제공 문제를 함께 봐야 한다고 지적함
- 분권화 의제 속에서 통합권역 또는 combined authorities를 통해 서비스 제공을 조정하려는 노력이 있으며, 서비스가 실제 이용자에게 얼마나 쉽게 체감되는지도 중요하다고 강조함
- (유럽연합, EU) 기능적 비도시지역 분석의 필요성을 지지하면서도, 정치·행정구역과 경제적·기능적 공간조직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함
- 유럽연합은 NUTS3 같은 행정·통계 단위가 정책과 재정배분의 기준으로 중요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실제 경제·생활권 조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함
- 따라서 서비스 제공을 더 잘 조직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만으로는 부족하며, 국제 비교가 가능한 공통 벤치마크가 필요하다고 평가함
- 기능적 도시지역이 이미 국제 비교의 공통 기준으로 자리 잡은 것처럼, 기능적 농촌 지역도 각국의 서비스 접근성과 정책을 비교·학습할 수 있는 기준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발언함

## (2) [Item 8] 지자체 간 협력의 극대화(활용) (10:30-11:30)

### ● RDPC 의장 발언

- 지자체 간 협력은 지방정부가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프라를 강화하며, 장기적인 지역발전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함
- 다만 실제로 지자체 간 협력을 추진해 본 국가들은 알 수 있듯이, 협력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며 강한 전제조건과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본 의제 논의를 시작함

- 주제 발표 내용

- 발표는 “Making inter-municipal cooperation work”라는 초안 보고서를 중심으로 진행함
- 발표는 지자체 간 협력이 단순한 행정기술이 아니라, 공공행동을 적절한 공간적 규모에서 조직하고 서비스 전달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설명함
- 특히 많은 지자체가 인구감소, 고령화, 재정 압박, 인력 부족, 복잡한 행정책임 증가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개별 지자체 단위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 넓은 기능적 공간 단위에서 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 해당 보고서는 44개 OECD 및 일부 가입 후보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다층거버넌스 전문가그룹 논의와 리투아니아의 공유 공공서비스 관련 TSI 프로젝트 경험도 반영함
- 발표는 지자체 조직의 현재 문제를 두 가지로 요약함
  - \* 첫째, 많은 국가에서 지자체 규모가 지나치게 작다는 점입니다. 발표에 따르면 약 4분의 1의 지자체가 2천 명 미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이 비율이 더 높음
  - \* 둘째, 규모가 작은 지자체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농촌과 도시를 막론하고 여러 지자체가 인력 부족, 예산 압박, 전문성 부족, 행정 경계를 넘어서는 복합적 책임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밝힘
- 이러한 역량 부족에 대응하는 선택지로 해당 보고서는 네 가지를 제시함
  - \* 첫째는 아웃소싱 둘째는 지자체 통합 셋째는 비대칭적 분권 넷째, 지자체 간 협력
- 지자체 간 협력의 장점은 여러 가지로 제시되었고, 이러한 협력은 지자체가 자율성과 시민과의 근접성을 유지하면서도 더 넓은 규모에서 함께 일할 수 있게 한다고 발언함
- 또한 자원, 인력, 장비, 전문성을 공유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비용을 줄이며 행정·기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함
- 더 나아가 행정경계를 넘어서는 공동계획과 공동투자를 가능하게 하며, 이는 OECD의 다층정부 간 효과적 공공투자 권고와도 연결함
- 그러나 발표에서는 지자체 간 협력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함
- 협력체가 새로운 거버넌스 층위를 만들면 행정 복잡성과 비용이 늘어날 수 있고, 책임 배분이 불명확하면 중복과 비효율이 생길 수 있다고 밝힘
- 협력 참여 지자체 간 역량 차이는 권력 불균형을 만들 수 있으며, 투명성과 책임성이 약화될 위험성에 대해서도 언급함
- 또한 협력이 항상 재정 효율성이나 비용절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협력은 신중

하게 설계하고 실행하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설명함

- 요컨대, 발표는 효과적인 지자체 간 협력을 위해 세 가지 기반이 필요하다고 정리함

\* 첫째는 법적 기반, 둘째는 제도적 기반, 셋째는 재정적 기반으로 요약

- 발표 말미에서는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 공정한 대표성, 지자체장 간 지속적 대화, 단계적 추진, 상호신뢰 형성, 투명성, 책임성, 시민 대상 정보 제공, 공통 지표와 정기 보고를 통한 성과관리도 강조함

● 주제 (Item) 관련 대표단 주요 발언

- (스웨덴) 지자체 간 협력이 지방정부의 역량을 높이고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함

- 다만 스웨덴은 지리적으로 넓은 지역이 많아, 학교와 같이 주민 접근성이 중요한 서비스의 경우 이웃 지자체와 협력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함

- 스웨덴은 일반적으로 학교와 노인돌봄처럼 비용이 많이 들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분야에서는 지자체 간 협력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함

- 반면 구조서비스나 보건 관련 일부 기능처럼 상대적으로 정치적 민감성이 낮은 분야에서는 협력이 더 쉽게 이루어진다고 평가함

- (폴란드) 지자체 간 협력이 지자체가 직면한 문제에 대응하는 핵심적이고 유연한 수단이라고 발언함

- 특히 기능적 공동체, 강한 법적 틀, 제도적 틀, 재정적 틀에 초점을 둔 보고서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동시에 폴란드는 지자체 간 행정역량과 재정역량의 격차가 협력의 큰 장애라고 지적하였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적 인센티브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함

- (프랑스) 선출직 대표가 참여하는 지자체 간 협력체가 공통 비전을 형성하는 데 중요하다고 발언함

- 프랑스는 대도시, 농촌공동체 등 협력의 수준과 유형에 따라 작동 방식과 필요한 권한, 행정적 적응이 다르다고 평가함

- 프랑스는 지자체 간 협력이 장기적 관점을 만들고 지방행정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함

- 특히 선거와 대표성의 구조를 통해 협력체가 정치적 정당성을 갖고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

- (포르투갈) 지자체 간 협력과 관련해 여러 과제를 제시하였고, 먼저 지자체의 규모, 인적자원, 재정자원, 기술역량이 서로 크게 다르다는 점 둘째, 수평적·수직적 다층거

버넌스 모델의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발언함

- 포르투갈과 같은 단일국가에서는 분권, 권한집중, 부처 간 협력의 방식이 중앙정부 프로그램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정책 변화가 이해관계자들에게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함
- 세 번째 과제로 유럽 결속정책 재원에 대한 의존을 언급, 많은 지자체 간 협력 수단과 통합영토 접근이 유럽기금에 의해 개발·지원되기 때문에, 재원의 지속성과 정책적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함
- 네 번째로는 역량강화를 강조하였고, 이는 지방 수준뿐만 아니라 하위지역, 지역, 중앙정부 수준까지 포함한 모든 단계의 역량강화를 의미한다고 발언함
- 포르투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재원을 활용한 영토수단, 특히 통합영토투자가 지자체 간 협력을 촉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였다고 평가함
- (유럽연합) 지자체 간 협력이 혁신을 촉진하고 더 영향력 있는 개발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발언함
- 유럽연합은 협력의 법적·재정적 조건과 함께, 약한 재정 인센티브가 협력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
- 또한 서비스 제공을 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 기업에게 더 나은 서비스, 지역경제에 더 나은 제안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취지 덧붙임
- (일본) 지난 20년 동안 지방공공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지자체 통합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함
- 그 결과 지자체 수가 약 3,200개에서 약 1,700개로 줄었다고 언급하였으나 많은 지방정부가 여전히 인구감소와 축소 문제를 겪고 있어, 지역경제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협력이 계속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고 발언함
- (이탈리아) OECD 보고서가 자국에 유용하다고 평가하면서, 최근 이탈리아의 두 가지 정책을 함께 검토할 것을 제안함
- 하나는 구조기금으로 공동재정 지원을 받은 내륙지역 전략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 회복·회복력 계획으로 지원된 그린커뮤니티 정책이라고 발언함
- 이탈리아는 이 두 정책 모두 지자체 간 협력이 핵심 요소였으며, 지역별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떤 조건이 성공을 가능하게 했는지 분석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고 주장함

### (3) [Item 9] 기후 회복탄력성을 위한 수(水)자원 거버넌스 (12:00-12:45)

- RDPC 의장 발언

- 2015년 RDPC가 OECD 수자원 거버넌스 원칙을 승인했고, 이 원칙이 이후 OECD 물 관련 이사회 권고에 포함되었다고 소개함
  - OECD 관련 작업반은 지난 10년간의 이행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조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2026년 12월 UN 물 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 주제 발표 내용
    - 발표의 핵심은 물 문제가 더 이상 환경정책이나 인프라정책의 일부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개발, 산업정책, 사회통합, 공간계획, 회복탄력성의 중심 의제가 되었다는 점을 핵심으로 설명함
    - 발표는 OECD가 약 15년 동안 RDPC와 관련 작업을 통해 물을 지역발전의 핵심 수단으로 다뤄 왔으며, 이 작업은 RDPC뿐 아니라 환경정책위원회, 농업위원회, 규제정책위원회, 개발원조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를 가로지르는 수평적 의제라고 설명함
    - 또한 수자원 안보의 위협을 네 가지로 구분함
      - \* 첫째는 홍수처럼 “물이 너무 많은” 위협이고, 둘째는 가뭄처럼 “물이 너무 적은” 위협, 셋째는 수질오염 문제이고, 넷째는 식수와 위생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문제라고 밝힘
      - \* OECD 국가들은 현재 식수와 위생서비스에서 보편적 접근에 가까운 수준을 달성한 경우가 많지만, 인프라 노후화와 재원 부족으로 앞으로도 이 수준이 유지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설명함
    - 발표는 기후변화가 자연재해를 강화하고, 주요 경제·인구 중심지가 하천 범람과 가뭄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고 설명함
    - 또한 인구증가 도시는 물 수요를 증가시키는 반면, 인구감소 지역은 기존 물 인프라를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이중 문제가 발생한다고 언급함
    - 도시 확산과 토지이용 변화는 홍수 노출을 높이고 지하수 함양을 줄여 물 리스크를 더욱 키운다고 지적함
    - 다음으로 물 문제가 디지털 전환, 녹색전환, 산업전환, 인구전환과도 직접 연결된다고 강조함
    - 데이터센터는 물 사용량이 많은 시설인데, 상당수가 이미 물 리스크가 높은 유역에 입지하고 있다고 설명함
    - 배터리 생산과 청정기술 제조도 안정적인 수자원을 필요로 하며, 반도체 같은 전략산업 역시 막대한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물 부족 지역에 입지할 경우, 산업정책과 수자원정책 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함

- 한편 인구가 크게 감소하는 지역에서는 물 네트워크가 과잉 규모로 남아 재정 부담과 유지관리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함
  - 이러한 이유로 OECD 관련 작업반은 수자원 거버넌스가 핵심이라고 강조함
  - 즉, 물 문제는 행정구역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농업, 보건, 산업, 도시계획, 환경 등 여러 부문을 동시에 가로지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밝힘
  - 또한 물 관련 책임은 지방으로 빠르게 이양되는 반면, 자원과 역량은 그만큼 따라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함
  - 수자원 부문은 자본집약적이고 지역성이 강하며 시장실패가 발생하기 쉬운 분야이므로, 규제와 거버넌스 설계가 중요하다고 설명함
  - 또한 발표에서는 어떤 국가도 자국의 물 안보를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 네덜란드처럼 물 관리 역량이 높은 국가에서도 담수 공급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브라질 사례처럼 지역 수자원 거버넌스 실패가 리우데자네이루와 상파울루 같은 대도시 간 긴장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함
  - 반대로 리투아니아와 에스토니아 사례처럼 행정·영토 개혁은 물 서비스의 효율성, 조정, 서비스 제공을 개선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함
  - OECD 수자원 거버넌스 원칙은 이러한 공통 병목과 해법을 이해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각국 정부가 부처 간, 정부 수준 간 물 거버넌스를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한 “12 가지 필수 사항”을 제시하는 기준으로 설명함
  - 이후 OECD는 지표체계, 10단계 자가진단 가이드, 현장사례 핸드북, 역량강화용 교육자료 등을 개발했고, 최근 조사에서는 100개 이상의 정부와 이해관계자가 이 원칙과 관련 자료를 일상 업무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함
  - 이번 글로벌 조사는 이러한 원칙이 여전히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한지 점검하는 작업이며, 글로벌 조사가 OECD 및 가입 후보국의 지난 10년간 물 거버넌스 개혁을 되돌아보고, 현재 글로벌 물 거버넌스의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 즉, 부실한 거버넌스의 비용과 좋은 거버넌스의 편익을 수집하고, 향후 물 회복탄력성을 위한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함
  - 각국 설문과 기술적 논의, OECD Water Governance Initiative 회의를 거쳐 최종 결과가 UN 2026 물 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힘
- 주제 (Item) 관련 대표단 주요 발언
    - (일본) 국제사회에서 물 거버넌스에 기여하고 있는 역할을 소개함
    - 일본은 2026년 UN 물 회의와 관련해 상호대화의 공동의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물, 기후, 생물다양성, 환경, 회복탄력성의 의제를 서로 연결된 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설명함

- 일본은 이러한 주제들이 수질과 수자원 관리에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균형 있고 통합적인 방식으로 논의해야 하며, 포용적 논의를 통해 구체적 약속과 행동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함
- 일본은 특히 물순환 전체를 보는 종합적 관점을 강조함
- 즉, 홍수처럼 물이 너무 많은 문제, 가뭄처럼 물이 너무 적은 문제, 오염된 물의 문제를 따로따로 다룰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물순환 체계 안에서 통합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함
- 또한 과학과 정책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숙련된 조정자와 촉진자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으며, 일본은 2026년 물 회의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효과적이고 책임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 계속 협력하겠다고 밝힘
- (멕시코) 수자원 회복탄력성이 국가의 핵심 정책 우선순위가 되었다고 설명함
- 멕시코는 가장 오염된 하천 시스템 중 하나를 복원하는 정책들을 마련했으며, 특정 유역을 우선 대상지로 삼아 통합적 지역 접근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함
- 이 유역은 9개 연방주와 240개 이상의 지방 단위를 포괄하는 매우 넓은 공간으로, 유연한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함
- 멕시코는 과거의 무질서한 개발과 습지 배수 정책이 물과 건강에 대한 인간의 권리를 훼손했다고 평가했고, 이를 되돌리기 위해 2025년부터 5개년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전략은 단순히 강을 정화하는 사업이 아니라 1,360km에 달하는 유역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 개입이라고 설명함
- (튀르키예) 지역 간 수자원 분포의 불균형을 핵심 문제로 제시함
- 발언에 따르면 서부와 북동부 일부 지역은 강수량이 높은 반면, 이스탄불과 동마르마라 지역은 높은 인구밀도 때문에 물 소비가 매우 크다고 설명함
- 또한 일부 폐쇄 유역에서는 지하수 이용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함
- 더불어 튀르키예는 물관리에서 유역 기반 접근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하였고, 대통령 산하 물 조정위원회가 존재하지만, 국가 차원의 물 전담기관과 포괄적 입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이를 위해 통합적 거버넌스와 자동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며, 국가 물관리 행동계획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힘
- (코스타리카) 물 공급이 국민에게 매우 중요한 우선순위이며, 전국 식수 공급 서비스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다고 소개함
- 최근 코스타리카는 하천 유역 차원의 물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한 개혁과 정책 의제

- 를 추진해 왔고, 이것이 농촌개발에도 구체적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함
- (크로아티아) 물이 지속가능성과 지역 회복탄력성의 중요한 요소라고 평가함
- 크로아티아는 국가 물관리계획을 통해 지역 수요에 맞춘 물관리 접근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 더 통합적인 체계로 전환해 왔다고 설명함
- 또한 물 공급, 폐수처리, 홍수 방지 등 주요 투자가 EU와 국가 재원을 통해 지원되었다고 밝힘

#### (4) [Item 10] 부동산 회복탄력성 (14:15-14:45)

- RDPC 의장 발언
  - 기후 관련 위험이 어떻게 부동산 투자와 전체 경제의 금융위험으로 전환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소개함
  - 관련 연구는 프랑스 생태전환부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으며, 부동산을 단순한 건축물이나 주거 문제가 아니라 지역개발과 경제 안정성의 핵심 자산으로 보고 접근했다고 설명함
- 주제 발표 내용
  - 발표는 「Future-proofing real estate investment: place-based risk」 보고서의 주요 결과를 소개함
  - 해당 보고서는 2025년 12월에 발간된 것으로, 2025년 한 해 동안 43개 기관이 참여한 태스크포스와 네 차례의 전문가 회의를 바탕으로 작성함
  - 발표의 출발점은 기후재난이 이미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으로 시작함
  - 가장 먼저 호주 사례를 제시하였고, 호주는 2030년까지 25개 부동산 중 1개가 보험 가입이 어려운 상태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전망을 소개함
  - 발표자는 이것이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발급되는 건축허가의 생애주기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함
  - 또한 프랑스의 폭염과 가뭄, 미국 로스앤젤레스 산불, 일본의 홍수 피해 등 여러 사례를 들며, 기후재난이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가속화되는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함
  - 부동산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그 자산 규모와 특성 때문이라고 설명하였고, 발표는 OECD 경제에서 부동산 부가 막대한 규모를 차지하며, 주거용 부동산과 상업용 부동산이 가계자산과 지역경제 안정성의 핵심 기반이라고 설명함

- 부동산은 수명이 길고, 가계와 기업에 큰 자본투입을 요구하며, 홍수, 폭염, 폭풍, 산불 등 자연재해에 직접 노출됩니다. 따라서 건물이 피해를 입으면 자산가치 하락, 보험 불가능성, 금융비용 상승, 사회·경제적 혼란으로 빠르게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함
- 발표의 중요한 메시지는 기후위험이 “지역 기반”이라는 점으로, 같은 국가 안에서도 홍수위험이나 폭염위험은 지역별로 크게 다르며, 어떤 지역은 국가 평균보다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함
- 그러나 실제 계획과 투자 결정은 여전히 너무 넓은 공간 단위의 집계자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위험이 실제로 발생하는 위치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다고 지적함
- 이와 관련해 발표자는 4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가장 큰 문제로 “세밀한 부동산 단위 위험자료의 부족”이 제기되었다고 설명함
- 정부는 모든 분석도구를 직접 만들 필요는 없지만, 이미 보유한 재해위험 자료를 개방하고, 상호운용 가능하며, 지역화되고, 접근 가능한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함
- 더불어 부동산 회복탄력성이 단일 행위자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함
- 그 이유는 개발업자, 건설사, 부동산 관리자, 가계, 정부, 규제기관, 대출기관, 보험사, 재보험사, 포트폴리오 관리자 등이 모두 같은 위험의 서로 다른 부분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힘
- 즉, 이들이 각자 다른 기준과 언어로 위험을 평가하면 위험관리의 빈틈이 생기고, 그 빈틈에서 재난이 경제적 위기로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함
- 보고서의 주요 발견은 다섯 가지로 정리함
  - \* 첫째, 기후위험은 이미 부동산의 자산가치, 현금흐름, 금융비용, 보험 가능성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 둘째, 위험은 본질적으로 장소 기반이며, 입지는 장기 성과와 자산좌초 위험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 됨
  - \* 셋째, 시장에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일관된 기후위험 데이터가 부족한 점을 지적함
  - \* 넷째, 보험 접근성이 고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점점 더 제한되고 불균등해지고 있다고 밝힘
  - \* 다섯째, 기준과 공시체계가 과편화되어 있어 부동산 금융의 국제적 성격에 비해 효율적인 자본배분이 어렵다는 점을 밝힘
- 이에 따른 권고도 네 가지로 제시함
  - \* 첫째, 고위험 지역에 새로 건설하는 것을 피하고, 계획과 투자 결정에서 기후위험을 명확히 보이게 해야함

- \* 둘째, 상호운용 가능하고 지역화된 위험데이터와 공시체계를 발전시켜야 함
  - \* 셋째, 개보수, 적응, 보호 인프라, 탈탄소화를 촉진하기 위해 금융 인센티브를 활용해야 함
  - \* 넷째, 기후위험의 측정과 보고를 위한 국제 기준을 발전시켜야 함
  - 후속 일정으로 OECD 지속가능건축 라운드테이블을 소개하였고, 해당 회의는 12월 3일부터 4일까지 열릴 예정이며, 희망자는 12월 2일 스마트시티 라운드테이블에도 참석할 수 있다고 안내함
  - 후속 일정의 주요 논의 주제는 건축물 전 생애 탄소, 에너지효율 조치의 비용효과성, 시각화와 스마트빌딩, 회복탄력적 건축물이며, 회복탄력적 건축물 세션에서는 물리적 기후위험과 각국 정부의 대응을 더 깊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 주제 (Item) 관련 대표단 주요 발언
    - (프랑스) 이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함
    - 프랑스는 자연위험에 대한 이해와 공공 정보 제공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부동산 구매자와 임차인이 위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함
    - 과거에는 홍수가 가장 큰 비용 항목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점토질 토양의 수축과 팽창 같은 새로운 위험도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언급함
    - 프랑스는 보고서의 여러 권고와 방향성이 자국의 문제의식과 부합한다고 평가함
    - 특히 위험정보의 투명성과 관련된 해법을 더 깊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기후위험 정보는 복잡하기 때문에, 부동산 구매자 개인에게만 모든 책임을 맡기는 것은 더 이상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프랑스는 이 연구가 중요한 첫 단계이며, 후속 파트너십에 참여해 이 작업을 발전시키고 싶다는 의사를 발언함
    - (일본)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한 국가 경험을 공유함
    - 일본은 거의 매년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과 산사태, 빈번한 지진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재해가 지역사회에 큰 피해를 준다고 설명함
    -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은 견고한 인프라 개발과 건축물의 내진성 강화를 추진해 왔다고 밝힘
    - 일본은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레드존과 옐로존 등으로 구분하고, 위험수준에 따라 규제를 적용한다고 설명함
    - 또한 일본에서는 부동산 거래 시 중개업자가 예비 구매자에게 재해위험을 설명해야 한다고 밝힘

- 이는 구매자가 위험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일본은 탄소배출 저감과 재해위험 대응을 위해 정부, 지방정부, 민간부문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공통된 이해와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함
- (미국) 기후재난의 재정적 손실이 재난 이후 보충예산이나 복구 지원을 판단하는 데 활용된다고 설명함
- 미국은 재난이 발생하면 피해 규모를 계량화해 지역사회 재건을 지원할 수 있는 추가 재정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한다고 밝힘
- 미국은 부동산 회복탄력성 논의를 주택공급과 주거비 부담 문제와 연결해 설명함
- 건강하고 역동적인 주택시장은 신규 주택건설과 기존 주택 개보수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지만, 미국에서는 여러 수준의 정부에 걸친 규제장벽, 느린 인허가 절차, 과도한 의무 부과가 건설을 지연시키고 개발을 제한하며 신규 주택 비용을 높였다고 지적함
- 나아가 이러한 제약은 많은 미국인의 주거비 부담을 키웠다고 설명함
- 미국은 이러한 장벽을 줄이고 납세자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투자를 촉진하며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 구체적으로 2026년 3월 13일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명령 14394호를 발령했으며, 이 명령은 환경, 밀도, 에너지효율, 인허가, 역사보존 관련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개정하도록 한다고 설명함

(5) [Item 11] 지역 회복탄력성과 재난 관리 (14:45-15:00)

● RDPC 의장 발언

- 이 안건이 RDPC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요청, 즉 비상상황 관리와 장기적 충격 회복력 구축에 대해 더 강한 분석 지원과 회원국 간 경험 공유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함
- 이러한 요구는 2025년 RDPC 의장 성명에도 반영되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OECD의 “지역 재난 회복탄력성 플랫폼” 개발 현황을 공유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소개함

● 주제 발표 내용

- 발표는 먼저 OECD 국가들이 최근 수십 년 동안 산불, 홍수, 팬데믹, 무력분쟁 등 다양한 재난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고 설명함
- 특히 기상 관련 재난은 지난 50년 동안 약 5배 증가했으며, 재난은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실제 피해와 대응은 특정 지역의 지리적 조건, 인프라, 사회적 역학에 따라 다르게 전개된다고 강조함

- 최근 OECD 연구에 따르면 극한 기상 현상은 지역 GDP를 평균 2.2% 감소시킬 수 있고, 그 손실 중 약 1.7%는 5년 후에도 남아 있으며, 피해 중심지에서 100km 이내의 인접 지역도 GDP가 최소 0.5% 하락할 수 있다고 설명함
  - 이에 따라 발표는 재난 회복탄력성 정책에서 “장소 기반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고, 이는 지역별 노출 정도, 취약성, 대응 역량을 고려하고, 지방정부뿐 아니라 시민사회, 지역 기업, 사회적 경제 조직 등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방식이라고 설명함
  - 지방정부는 핵심 인프라 제공, 긴급서비스 지원, 재건 계획 수립에서 최전선에 있지만, 실제로는 권한 배분, 재정 지원, 책임 구조가 불명확하거나 분절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함
  - 또한 OECD가 이 플랫폼을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여러 국가별 보고서와 주제별 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함
  - 예시로 2023년 튀르키예 남부 지진 이후 재건, 이탈리아 라퀼라 지진 이후 복구, 우크라이나 관련 작업, 수자원 관리, 도시 위험, 재정 회복탄력성 등의 기존 연구를 언급함
  - 발표는 이 작업들로부터 세 가지 핵심 교훈을 도출함
    - \* 첫째, 지역 맥락이 중요하다는 점 둘째, 어느 한 정부 수준이나 단일 행위자만으로는 재난을 관리할 수 없다는 점 셋째, 재난의 유형과 규모는 다르더라도 거버넌스 문제는 책임 분절, 자원 부족, 조정 한계 등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점
  - 이와 더불어 플랫폼의 주요 기능을 두 가지로 제시함
    - \* 첫 번째는 지식 제공, 정책 지침, 동료 학습을 지원하는 기능, 두 번째는 재난 발생 시 전문가를 신속히 동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
  - 참여 방식으로는 플랫폼의 실무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 온라인 자료집에 우수사례를 제공하는 것, 위기 시 동원 가능한 전문가를 추천하는 것, 주제별 연구나 동료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제안함
- 주제 (Item) 관련 대표단 주요 발언
    - (일본) 최근 OECD에 자발적 기여를 했다고 밝히며, OECD 회원국과 글로벌 사우스 모두에서 재난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 일본은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러 국가와 협력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이 플랫폼이 그러한 국제 협력의 장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함
    - (미국) 이 주제를 재난 대응 차원에만 국한하지 말고, 장기적 경제 회복의 관점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재난이 발생하면 지역경제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 상당한 개입이 필요하며, 동시에 재난 이후의 회복 과정은 지역사회의 경제적 궤적을 새롭게 설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함
- 미국은 자국의 경제개발청이 운영하는 다중 관할권 기반 계획 수립 절차를 사례로 제시하였고, 특히 “종합 경제개발 전략”과 같은 계획 과정을 거친 지역사회가 코로나19 이후 경제적으로 약 60% 더 빠르게 회복했다는 연구 결과를 공유할 수 있다고 밝힘
- 이를 바탕으로 미국은 재난 회복력 논의에서 계획 수립의 정량적 가치와 장기적 경제 회복 역량을 명확히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
- (프랑스) 발표 내용에 대해 향후 일정과 추진 절차를 다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함
- 예를 들어, 플랫폼이 앞으로 어떤 일정으로 진행될지, 출범 행사와 후속 작업이 어떻게 이어질지에 관심을 보임
- (스페인) 스페인은 이미 플랫폼 출범 행사와 관련하여 일정 조율을 진행 중이며, OECD 관련 작업반과 스페인이 플랫폼 출범 행사를 주최하기로 한 상태임을 발언함
-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날짜가 확정되면 RDPC 대표단에 초청과 추가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함

(6) [Item 12] 향후 과업 및 추진 일정 안내, 회의 폐회 (15:15-15:30)

- RDPC mandate 관련 후속 절차
  - 의장은 RDPC mandate 문안에 대해 전날 논의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함
  - 특히 “data-directed evidence”라는 표현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다만 여성과 남성 간 불평등, 기후변화, 저탄소경제 전환 등 일부 표현은 아직 합의되지 않아 대괄호로 표시된 상태라고 설명함
  - 의장은 여성과 여아의 평등 증진을 가로막는 장벽에 초점을 둔 새로운 절충 문안을 제안함
  - 미국은 이 문안이 mandate에서 문제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후 PWB와 구체적 산출물에서 해결 방안을 다루는 방식과 부합한다며 지지 의사를 밝힘
  - 그러나 프랑스와 멕시코 등은 본국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멕시코는 24시간 내 피드백을 요구하는 절차가 지나치게 촉박하다고 문제를 제기함
  - 이에 의장은 최종 문안을 회람하고, 다음 날 오후 3시까지 각국이 동의 여부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함
  - 다만 시간상 협의가 어려운 국가는 입장을 유보할 수 있으며, 합의되지 않은 문안은 대괄호로 남겨 이사회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설명함

- 독일은 “지속가능성”과 “생물다양성 보호 및 복원”이 OECD의 핵심 가치이므로 mandate 문안에서 쉽게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이 사안은 이사회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힘
- PWB 추진 일정
  - 의장은 PWB, 즉 Programme of Work and Budget와 관련하여 5월 중 우선순위 설정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안내함
  - 5월 7일까지 Rev. 2 버전에 대한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하며, 담당 작업반은 이번 위원회 논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수정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함
  - PWB는 5월 말 승인 절차에 제출될 예정이며, 6월 17일 예산위원회 일정과도 연결되어 있어 내부 절차상 일정이 매우 촉박하다고 설명했고, 따라서 각국 대표단의 신속한 검토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함
- OECD 가입 심사 관련 업데이트
  - 의장은 OECD 가입 절차와 관련한 RDPC의 역할도 간략히 설명함
  - RDPC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페루, 루마니아의 가입에 관한 공식 의견을 채택했으며, 이들 국가는 전체 OECD 가입 절차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함
  - 브라질의 가입 절차는 현재 일시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고, 한편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태국에 대해서는 OECD 내 26개 기술위원회가 심층 검토를 진행 중이며, RDPC는 아르헨티나와 인도네시아에 대해 2027년 봄 첫 기술 논의를 진행하고, 태국은 그 이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안내함
- 위원회 운영 방식 개선
  - 의장은 이번 회의 동안 문서 배포 시기, 논의 일정, 대표단 참여 방식 등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기되었다고 언급했고, 이에 따라 RDPC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위원회 운영 방식 개선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힘
  - 우선 Bureau 차원에서 운영 방식 개선안을 논의한 뒤, 차기 RDPC 회의 전까지 보다 구체적인 제안을 대표단에 제시하겠다고 설명함
- 차기 회의 일정
  - 차기 RDPC 위원회 회의는 12월 7일이 시작되는 주에 개최될 예정이라고 안내함

- 해당 주간에는 RDPC 본회의뿐 아니라 모든 작업반 회의와 다층적 거버넌스 전문가그룹 회의가 함께 열릴 예정으로 즉, 차기 회의는 RDPC 관련 주요 작업반과 전문가그룹이 모두 참여하는 종합 회의 주간으로 계획되었다고 설명함
- 회의 폐회 발언
  - 의장은 이번 회의를 주재하게 되어 기뻐했다고 밝히며, 대표단이 매우 어려운 쟁점들을 다루었음에도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함
  - 일부 사안은 아직 위원회 밖에서 추가적으로 처리되어야 하지만, 전반적으로 회원국들이 건설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로 논의에 임한 점에 감사를 표함
  - 또한 의장은 회의 중 진행된 여러 주제 발표와 토론이 매우 유익했다고 평가하고, 통역진의 노고에도 별도로 감사 인사를 전함
  - 끝으로 참석자들에게 귀국길의 안전을 기원하며, 향후 온라인 및 대면 방식으로 계속 소통해 나가자고 발언함
  - 폐회 직후 한 대표단이 최종 문안 공유 시점을 질문하자, 의장은 해당 문안이 곧바로 온라인에 게시될 것이라고 답하였고, 이에 따라 회의는 문안 후속 검토와 각국 내부 협의를 남겨둔 채 RDPC 2일차 회의를 공식적으로 종료함

## 국토연구원(KRIHS)-OECD 실무자급 업무협의회

### 1. 회의명

- 국토연구원 (KRIHS) -OECD 실무자급 업무협의회

### 2. 일시 및 장소

- 2026년 4월 24일 (금), 10:00 ~ 12:00
- OECD Headquarters Meeting Room

### 3. 참석자

- 윤지수 정책분석관 (Junior Policy Analyst, Centre for Entrepreneurship, SMEs, Regions and Cities, OECD)
- 신서경 부연구위원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도시정책·환경연구센터)

### 4. 주요 논의내용

- 국토연구원-OECD 간 국제협력 관점의 공동연구 수행 가능성, 주요 연구 주제 동향 및 아이디어 발굴 등 의견 청취
  - RDPC 회의 참석이라는 일회성 참여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인 연구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상호 공감함
  - 한국 대표단의 입장에서 한국의 현안과 문제점을 공유하는 수준의 논의도 유의미하며 무엇보다 상호 교류와 네트워크가 전제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일례로 올해 2026년 하반기 예정된 OECD 작업반별 프로젝트에서 한국 대표단이 회의에 참석하는 등 능동적 참여도 연구 협력의 단초가 될 수 있음
- 2026년 하반기 국토연구원-OECD 공동연구 수행 가능성에 관한 의견 청취
  - 비도시정책 작업반 및 RDPC 회의 주제를 중심으로 하반기 OECD 추진 프로젝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먼저 하반기 OECD의 비도시지역 개발 업무는 크게 다섯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음
  - \* 첫째, 농촌 회복력과 장소기반 정책을 중심으로 새 Programme of Work and Budget 을 구체화
  - \* 둘째, 인구감소, 고령화, 노동력 부족, 사회적경제를 연결해 사회적 축 연구 지속
  - \* 셋째, 기능적 비도시지역, 비도시지역 일상 생활권, 비도시-도시 연계, 주택 등 공간·서비스 접근성 기반 분석 강화
  - \* 넷째, 관광, 자연자원, 산림, 에너지, 데이터센터, 방위산업 등 비도시지역의 경제적 자산을 지역발전 기회로 전환하는 정책연구
  - \* 다섯째, 데이터·AI·지표·평가체계를 활용해 농촌정책의 모니터링과 평가 개선
- 다음으로 RDPC 회의 후 업무는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 RDPC mandate 후속 조정: 합의되지 않은 문안, 특히 불평등, 기후변화, 저탄소경제 전환, 지속가능성, 생물다양성 관련 표현에 대해 각국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필요시 대괄호 처리된 상태로 OECD 이사회에 상정하는 등의 후속 조치 진행 예정
  - \* PWB 추진: 5월 중 Programme of Work and Budget 우선순위 설정을 진행하고, 5월 7일까지 Rev.2 버전에 대한 검토를 반영한 뒤, 5월 말 승인 절차로 제출할 예정으로 6월 예산위원회 일정과 연계되어 있어 신속한 검토가 요구됨
  - \* 가입 심사 대응: RDPC는 기존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페루, 루마니아 가입 관련 공식 의견을 채택했으며, 향후 아르헨티나와 인도네시아는 2027년 봄, 태국은 그 이후 기술 논의를 진행할 예정임
  - \* 위원회 운영 개선 및 차기 회의 준비: 문서 배포 시기, 대표단 참여 방식, 회의 운영 효율성 등에 대한 개선안을 Bureau에서 먼저 논의한 뒤 대표단에 제시할 예정이며, 차기 RDPC 회의는 12월 7일이 시작되는 주에 개최되며, 본회의와 작업반, 다층적 거버넌스 전문가그룹 회의가 함께 열릴 예정임
- 이와 같은 일련의 후속 일정을 참고하여 국토연구원의 지속적인 참여 방안과 논의 주제를 선점하거나 제안하는 등 능동적 참여가 필요함
- 끝으로 OECD는 K-AI City 정책과 관련한 AI 관련 협동 연구를 올해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으로 이를 계기로 국토연구원과 지속적인 교류와 연구 협력이 이뤄지기를 기대함